

철도 민영화 반대 등
노동자 투쟁

▶ 2~7, 20 면

파시즘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맞설 것인가?

▶ 8~13 면

국가기관
대선개입 부패 문제

▶ 16 면

진보 정당 탄압과
헌법 내 전략

▶ 17 면

북한과 중국의
시장 개혁

▶ 14~15 면

발행인_김인식 편집인_김인식
인쇄인_ (주)아미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6499-279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4 8

Left21.com

제116호 | 2013년 11월 25일 ~ 12월 8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프트21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관련 기사 3·4면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하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인정하라

리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오염수는 통제되고 있다.”
일본 ‘2013 유엔 신어·유행어’ 대상 후보에 오른 아베의 말

“앞으로는 민주화도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뻔뻔한 이명박, 국정원 정치 공작이 선진화?

“[이명박의 부자 감세는]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더 많은 조세 혜택을 줬다. 감세 결과로 경제가 회복돼 일자리 창출이 유발됐다는 측면에서 부자 감세로 명명이 어렵다.”
부총리 현오석, 웬 ‘도라이’ 같은 소리?

“사이버심리전은 군사적으로 ‘대내심리전’으로서 자국민에게도 수행할 수 있다.”
국방장관 김관진

“짜리시(증권이 정보지)에서 봤다.”
남북회담 대화록 입수 경로에 대한 김무성의 비겁한 변명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은] 길이 좁아서 일어난 교통사고”
경기도지사 김문수

“파리 시위는 통진당과 무관한 순수 교민 시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위참가자 일동 명의로 통진당 해산돼야 한다고 발표하라. 그렇지 나도 사과하겠다.”
새누리당 김진태의 뻔뻔함

“물타기, 물타기 그러는데 전공노, 전교조 얘기한다고 그거 물타기가 되겠습니까?”
새누리당 대변인 유일호, 알면서 그 따위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기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동북아역사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세연

“유신 독재가 뭐가 잘못됐다.”
《중앙일보》논설위원 김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신반인이다.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구미시장 남유진의 낯뜨거운 박정희 찬양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 중 누가 낫나?”
“채동욱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아느냐. 본적 세탁을 했지만 전라도 출신이라서 그렇다.”
경북대 로스쿨 면접관 교수

“[박근혜가] 한국말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나라당의 윤리특위위원장이었던 목사 인명진, 오죽하면

통합진보당 김재연: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땀 흘려 일하는 이 땅의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
새누리당 이장우: “그게 김일성주의인 거야. 김일성주의.”
역시 천재별 우의 정당다운 반응

“정의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이가 없고 진실로써 재판하는 이가 없고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이야기하며 재앙을 잉태하여 악을 낳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대법원 판결

신문 판매가 집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법원

2010년 5월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필자를 포함한 판매자 6명이 경찰에게 강제 연행돼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14일에 나왔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레프트21〉 판매가 “외형상 신문 판매 행위라는 형식을 띠었을 뿐 실제로는 안보위기 등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동 의견을 [알리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 ‘집회’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판매자 6명 중 1명은 ‘집회’ 주최자라며 유죄(선고유예), 5명은 단순 가담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문 판매를 집회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할 예정이었던 〈레프트21〉 강남역 거리 판매를 가로막았다. 판매자 연행 사건 이후 〈레프트21〉 측이 불가피하게 내고 있던 집회 신고를 불허한 것이다.
대법원이 5명 무죄를 인정했지만 그것은 생색내기일 뿐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검찰과



대법원은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경찰과 검찰의 탄압을 정당화한 것이다.

경찰의 의도에 사법부가 최종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의도를 거둬 드러냈다. 검찰은 〈레프트21〉의 좌파적인 주장을 문제 삼았고, 경찰은 판매자들을 연행하면서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재갈 물리기 시도
법원도 〈레프트21〉의 좌파적 주장이 거슬렸을 것이다. “안보위기 등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동 의견[을 알리려 했다]”는 판결문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임금과 연금을 공격하려는 수작

양운석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주 동안 노조 서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내용까지 뒤지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은 곳은 지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 기관들이다. 국가 기관이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대표적인 부패 행위이고 정의에도 위배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건 윤리적으로 정당한 로비(영향력 행사) 활동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겠다고면서 대선과 전혀 관계없는 노조의 각종 사업과 투쟁 계획 등 노조 활동 전반에 관한 자료를 모조리 압수해 갔다. 최근 새누리당은 이에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사용 문제까지 시비를 걸고 있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과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물타기이자, 공무원노조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다. 설립신고를 두고 공무원노조에게 사기친 정부가 이제 노조 활동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함께,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무감사를 진행하며 현장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당

삭감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악까지 추진하려고 길 닦기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와 보수언론은 공무원연금 개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막는 3가지 장벽 가운데 하나로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언급했다. 이 반발을 약화시키려고 정부는 “국민층을 돕는 기초생활보장제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쓰는 돈이 더 많다”며 이간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층을 위한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는 반면 조세도파처에 숨겨진 천문화적인 돈과 이간희와 같은 재벌들의 탈세를 눈감아 온 정부가 ‘국민층을 위한 예산’과 공무원연금을 연결시키는 것은 계급 차별 행위로 완전한 위선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 확대를 추진하면서, 형평성을 맞추려면 공무원연금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핑계로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을 공격하는 물귀신 같은 수작을 부리고 있다.

지금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계획의 일부다. 단결과 연대로 이런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정부의 탄압과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과 각종 수당 삭감, 시간제 공무원 도입, 공무원연금 개악을 연결시켜 조합원들의 불만을 실질적인 투쟁으로 모아 내야 한다.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http://workerssolidarity.org>)



부산 지회
국정원 선거 개입과 마녀사냥 등을 통해 보기 — 국가란 무엇이고 어떤 구실을 하는가
연사: 차승일(〈레프트21〉 기자)
일시: 11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면 리빙스퀘어 2번 강의실
참가비: 4,000원 (학생 3,000원)
문의: 010-2008-0588

경기 지회
국가란 무엇인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연사: 강철규 (노동자연대다함께 활동가)
일시: 11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회의실
참가비: 2,000원 (학생 1,000원)
문의: 010-8700-4647

서울 중북부지구
시간제 일자리와 박근혜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 — 무엇이 문제인가?
연사: 김하영(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11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6호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OGV 옆 건물)
참가비: 2,000원(청소년 1,000원)
문의: 010-9820-5698

서울 서부지구
심화하는 재정위기와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 쟁점과 전망
연사: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11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공간 여성과 일” 지하교육장(한국여성노동자회)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서교동 방향으로 50미터 직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뒤편 조선화로구이 골목
참가비: 3,000원(학생·청소년 2,000원)
문의: 010-8288-2652 (문자도 환영)

서울 동부지구
시간제 일자리와 박근혜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 — 무엇이 문제인가
연사: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5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22강의실(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3,500원(학생 2,500원)
문의: 010-9840-1236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주최하는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유럽의 신나치 — 왜 부상하고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연사: 차승일 (〈레프트21〉 기자)
일시: 11월 27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관 314b호
참가비: 2,000원 / 문의: 010-5678-8630

민영화, 연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12월 2일(월) 서울 | 시간·장소 추후 공지
관권 부정선거 공약 파기 민생파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12월 7일(토) 오후 3시 | 장소 서울역 | 주최: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지지하라

이정원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시금석이 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기어이 12월 초에 강행하려 한다.

박근혜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철도 등 공공부문 시장 개방도 약속했다(관련 기사 4면). 이는 재정 위기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 속에서 공공부문 부채 감축과 재정 지출 절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압박이 커지자, 철도공사 측은 변변찮은 반대도 못 해 본 채 12월 10일을 전후로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따른 지분 투자를 결정하려 한다.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는 취임하자마자 임금 동결과 현장 통제 강화 등을 추진하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어 민영화 추진에도 나선 것이다.

지금 철도공사 측은 고작,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되 공사의 지분을 늘리는 안으로 정부와 협상하려 한다. 그러나 설사 신설 법인의 공사 지분이 1백 퍼센트가 될지라도, 법인이 분리되면 지분을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수순을 밟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철도노조가 밝혀 왔듯이, 공사 지분율이 1백 퍼센트일지라도 그것이 민영화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철도공사 측이 민영화를 향해 속도를 내는 지금도, 반대 여론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줄기차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잡아땀지만, 전국적으로 1백1만 8백 명이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철도노조와 전국 지역·권역별로 조직된 철도 민영화 반대 대책위들이 지난 2년간 일궈 온 소중한 성과다.

이런 광범한 반대 여론 때문에 심지어 적잖은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의 정책이 민영화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매일노동뉴스>가 발표한 국회의원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국회의



이런 광범한 여론과 철도노조의 단호한 파업이 결합할 때 철도 민영화를 저지할 수 있다. 11월 20일 철도 민영화 반대 백만 서명 돌파 기자회견.

박근혜와 지배자들은
총공세로 맞서려 할 것이다.
노동계급도 단결과 연대로
함께 맞서야 한다.

원 10명 중 4명이 이런 의견을 표명했고, 36퍼센트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이런 여론도 무시하며 돌진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파업과 광범한 연대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1백만 명의 반대 목소리

이미 철도노조는 지난 11월 14일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철도공사 이사회가 지분 투자 결정을 하면, 즉각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추진 의지가 더 분명해지면서, 실질적인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이하 범대위),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그리고 전국의 지역대책위들도 노조의 파업을 지지

하고 연대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20일 소속단체, 전국 지역대책위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파업 지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며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이제 그동안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기울여 온 모든 노력과 활동을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연호하는 활동으로 모아 가야 한다.
연대 투쟁에서 무엇보다 핵심적인 부문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다. 철도 민영화 저지는 단지 철도 노동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이는 공공서비스 파괴와 구조조정 확대를 막기 위한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므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다 함께 연대해 투쟁해야 한다.
게다가 이 투쟁의 성패는 공공부문에 대한 확대되는 공격,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 등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를 추진

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와 지배자들은 총공세로 맞서려 할 것이다. 노동계급도 단결과 연대로 함께 맞서야 한다.
특히 철도 노동자들의 업무와 연관된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이 일체의 업무 협조를 하지 않는 블레킹이 매우 중요하다. 화물연대와 지하철노조의 대체수송 거부, 열차 증편 운행 거부 등은 노동자들의 연대를 과시하고 철도노조의 파업 효과를 높이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할 수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과 그에 대한 광범한 연대로 맞선다면, 박근혜의 고삐 풀린 민영화 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 불과 보름 남짓 남은 시간 동안 이 투쟁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지금 노동운동과 진보진영 활동가들의 핵심적 과제가 돼야 한다.

전면 파업으로 파업 효과와 단결을 극대화하자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뿐 아니라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등 현안 요구들을 함께 내놓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0퍼센트로 가결했다. 이런 요구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마땅히 현안 문제를 함께 걸고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런 요구들을 결합시키면서 파업의 '합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려는 듯하다. 임금 인상 요구는 정부가 금지하는 '정치 파업'의 쟁점이 아니니, 입단협을 명분으로 '합법적 파업', 즉 필수수지업무제를 지키는 이른바 '필공 파업'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구의 결합과 필공 파업 전술은 별개 문제다. 파업 전술에서는 무엇이 효과적인지가 핵심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
물론 예상되는 정부의 '불법 파업' 십자포화에 맞서 노조의 정당한 쟁의권 행사라는 명분을 얻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특히 '필수수지업무제도'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쟁의권조차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랄한 제도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제도를 활용

하고 있지만, 요금 폭등, 안전 사고 등을 낳을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공익'을 말할 자격은 없다.
그럼에도 필공 파업은 파업의 효과 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일단 노조가 '합법적' 명분을 위해 필공 파업을 한다 해도, 민영화 반대라는 정치적 문제가 걸린 이상 이번 파업에는 무조건 '불법' 딱지가 따를 것이다. 2009년에도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철도 노동자들을 탄압한 바 있다.
무엇보다, 필공 파업은 충분한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결정적 약점이 있다. 2009년에 철도노조는 9일 동안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였는데도 열차를 마비시키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 조합원의 절반 가량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고, 철도 운행의 핵심 부분인 KTX와 수도권 전동 열차 등 여객 열차의 운행을 마비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필수수지업무제도의 유지를 받아들이면, 파업 참가가 금지되는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 사이에 단결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지적해

왔듯이, 전국 교통망을 마비시킬 정도로 단호하게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대답하라, 대답하라, 대답하라!” — 당통
물론 전면 파업에 돌입했을 때 쏟아질 비난과 탄압의 총공세에 대한 철도노조 지도부의 부담은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와의 정면 충돌은 피하고자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에서부터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고, 따라서 노동자들이 굴복하지 않는 이상 파업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든 정면 충돌 양상을 펼 수밖에 없다.
철도 노동자들의 어깨에 놓인 짐이 무겁겠지만,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면 파업 성과를 보장하기도 어렵다. 결국 효과를 극대화한 파업을 해야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탄압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부 동지들은 전면 파업을 하면 우리 편의 지지 여론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결정돼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충돌이 커질수록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고, 이 논쟁에서 우리 편은 결코 불리하지 않다.

박근혜도 민영화가 인기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사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우겨 온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화를 감수하고 시정명령을 거부한 것은 고립은커녕 지지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간 기반을 잘 다져 놓은 기층의 대책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효과는 별로 없이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저들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파업 효과를 떨어뜨리고 이러저러한 역공을 취할 온갖 기회를 더 쉽게 발견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직력이 충분치 않아 필공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껏 노조의 전면 파업 호소에 부응해 현장을 조직해 온 적지 않은 지부장과 활동가들이 있다. 오히려 지금의 필공 파업 논란은 이런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지역·직종·지부별 편차가 있겠지만, 철도 민영화 저지라는 만만치 않은 요구를 성취하려면, 단호한 활동가들이 비교적 자신감이 덜한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서울·용산·청량리 기관사 지부장들이 공개적으로 전면파업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크다.
게다가 올해 내내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맞선 직종·지부별 투쟁들은 적잖은 승리를 거두는 저력도 보여 줬다.
따라서 이런 가능성을 주목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며 전면 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추천 소재자

철도 민영화 반대 시리즈 2
철도 민영화, 재앙을 향한 탈선 —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박설, 이정원 외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3,500원

구입 문의
02-2271-2395, 010-8908-7912

※ 20권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트몽드》)

박근혜가 프랑스 기업주들에게 ‘도시철도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박근혜가 입국도 하기 전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담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결서까지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국회 논의조차 거추장스럽다는 이 정부의 후안무치에 많은 이들이 치를 떠는 이유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곧바로 ‘철도 등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장 개방은 공공부문에 더 많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도 탄력을 줄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자본 시장 개방 폭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국내 공공기관 조달 사업 대부분이 개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근본적 이유는 IMF·세계은행과 함께 신자유주의 추진의 삼두마차로 꼽히는 WTO가 전 세계에 미친 악영향 때문이다. WTO는 1995년 출범 이래 공공서비스·교육·보건의료·환경·농업·금융 등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을 투자 대상으로 만들고 자본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바꿔놓았다.

예컨대, WTO 일반서비스협정은 자본의 새로운 돈벌이 활로를 열어 줬다. 이 협정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 경쟁에 내맡기고 민영화 하도록 촉진하는 구실을 해 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WTO 정부조달협정도 공공 조달 부문에 시장 경쟁을 도입·확대·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WTO 출범과 함께 이 부문의 무역 장벽이 제거됐고, 점차 확대됐다.

정부조달 시장은 중앙정부 부처·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역의 방대한 물품·서비스 조달 사업 부문을 포함한다. 그만큼 시장 규모는 상당한데, 주요 선진국의 경우 그 비중이 GDP(국내총생산)의 10퍼센트 이상이 될 정도다. 한국도 GDP의 8퍼센트에 이르는 대규모 시장을 갖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사업 분야에



프랑스 기업주들에게 ‘개방’이라는 선물을 준 박근혜 11월 4일 프랑스기업연합회에서 열린 한-프 경제인 간담회.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져 왔고, 경쟁적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려는 국가 간 각축전도 치열해졌다.

선도적

한국 정부도 이미 1994년에 24번째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최근 선도적으로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조달 시장 개방·시장 침투율은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의 곱절이 넘을 만큼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도시철도 부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프랑스 기업주들에게 박근혜가 ‘개방’이라는 선물을 안겨 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주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해외 시장 진출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국내적으로도 시장 개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개방·개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노동계급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안 된다. 오히려 공공서비스 후퇴, 구조조정 확대 등 고통만 안겨 줄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정부조달 사업 분야의 시장 개방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확대·촉진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오랫동안

동안 WTO와 민영화 등의 폐해를 분석·폭로해 온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이 그 자체로 해외 기업에 철도 등의 운영권을 직접 넘겨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민영화 방식과 연결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민영화 방식은 민간 자본이 시설을 지은 후 20~3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되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 혹은 시설 투자 이후 임대료를 받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등이다. 즉, 정부조달 부문에 해당하는 시설 투자와 운영권 확보는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은 철도 등을 민영화하기 쉽게 만든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이미 WTO 정부조달협정의 개방 수준을 능가하는 시장 접근을 허용했는데, 기재부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각종 민간투자제도 활용(민영화)가 능력을 열어 놓는 것이었다.

시장 개방 확대는 민간위탁·외주화 등도 확대해 공공부문의 영역을 축소시킬 것이다.

둘째, 시장 개방은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허무는 구실도 될 것이다.

몇 해 전 미국의 좌파 월간지 《먼슬리 리뷰》는 “WTO 정부조달협정이 각국 정부가 조달계약을 발주할 때 노동이나 환경과 관련된 관행과 같은 비경제적 기준을 적용할 권한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협정은 각종 규제를 금지하고 순전히 경제적 기준에 준하는 계약 협정을 맺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안전보건 조치 강화 등 각종 노동·환경 규제를 하거나, 장애인 고용 등 사회적 약자 고용기업 우선 지원 등을 위해 특정 기업을 입찰에서 제외·선택하게 되면, 이는 WTO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지자체 등의 관련 법·제도·조례 등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이번 개정안의 결이 ‘민영화와 관련없다’거나 ‘국민의 이익’ 운운하는 것은 완전한 사기다. 공공부문을 자본의 노름판으로 만들려는 WTO 정부조달협정은 폐기돼야 한다.

박설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시행을 막아야 한다

철도공사는 11월 25일부터 중앙선 여객열차와 경부선·호남선 일부 구간의 화물열차에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는 운전 분야 적자를 해결한다며 기관사 인력 감축을 위해 1인 승무를 강행하려 한다.

이번에 공사 측이 내놓은 계획은 지난 7월 시범운영 계획보다 더 나아가 호남선 화물열차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게다가 중앙선의 경우, 시범운영을 위한 임시 열차까지 편성해 관리자인 팀장이 혼자 운전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조합원이 운전하고 팀장은 뒤에서 감독만 하려 했던 것보다 강수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최연혜는 기어이 1인 승무를 확대하려 한다. 이는 인력 감축을 통해 민영화를 용이하게 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도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데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1인 승무 시범 운영을 저지한다면, 민영화 저지 파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전

무엇보다 1인 승무 저지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객열차든 화물열차든 1인 승무는 안전과 직결된다.

중앙선은 곡선·터널이 많고, 상행과 하행을 같이 써 사소한 실수가 정면 충돌이나 탈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화물열차는 다른 열차 승무원이 없기 때문에 기관사를 한 명으로 줄이면 비상상황 시 혼자 사고 처리 등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1인 승무 확대를 막아야 한다. 해당 직종 노동자의 투쟁을 엄호하며, 철도노조 전체가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김은영·이정현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 말한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철도 민영화의 마중물”

정부는 WTO 조달협정 개정이 민영화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개방됐는데, 민영화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달협정 개정은 민영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첫 민자선인 지하철 9호선에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가 들어온 과정을 살펴 보죠. 9호선은 처음부터 BTO 방식(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즉, 민간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하고, 소유권은 지자체에 넘기되 일정 기간 민간 기업이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운영을 민간이 해야겠죠. 그런데 국내에는 철도를 운영할 기술을 가진 곳이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



영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해외 자본을 찾는 거죠. 지하철 9호선은 베올리아와 같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조달협정에 도시철도를 전면 개방하는 것은, 이런 자본들이 더 공격적으로

도시철도 시장에 진출할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 유지·보수, 운영의 단계별로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특히 도시철도는 해외자본이 진출하기 알맞은 사업 규모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조달협정이 “고속철도와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서발 KTX를 예로 들어 보죠.

지금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와 분리해 별도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수서발 KTX의 경영진이 ‘효율적 운영’을 명목으로 수서발 KTX를 섹터별로 나눠 아웃소싱 하면, 조달협정에 따라 여러 해외기업들이 진출할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특히 수서발 KTX는 흑자노선이기 때문에 자본의 좋은 이윤 추구 대상입니다.

수서발 KTX 회사가 지분을 매각하게 될 경우, 이미 진출한 자본이 지분을 사들여 운영권마저 넘볼 수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

과거에 민영화는 간단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통째로 또는 운영권을 매각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건 민영화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우 교묘하고 은밀하게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공기업이지만, 실상은 민간기업과 닮은꼴 구조로 만들고 운영합니다. 그러다 결국 조건과 환경이 되면, 공기업이라는 껍데기마저 버립니다. 마치 트로이 목마 같은 것이죠.

조달협정 그 자체가 민간기업에 공기업 매각하는 것이라고 할 순 없어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마중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의 국적과 상관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해외자본이든 민간자본이든, 중요한 것은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민간기업이 잠식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철도는 공기업이 운영하고, 민간기업이 들어오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 개방 흐름이 가속화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인터뷰·정리: 성지현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에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선인가다”

조명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 도입,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11월 14~15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이하 전회련학비본부) 파업에 이어 11월 29일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여성노조를 중심으로 부산, 울산, 전북 등지에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우파와 지배자 들은 “급식 차질” 운운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충북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해고하라”고 기자회견을 여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이윤 논리와 차별로 학교를 망가뜨려 온 정부와 사용자들이야말로 비난받아야 한다. 학교에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아이들에게 “공부 못하면 비정규직 된다”며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경쟁과 입시교육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저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충북의 한 학교 학생들은 파업 노동자들이 학교 앞을 행진하자 손을 흔들고 박수 치며 응원을 보냈다.

지난해 11월의 파업은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모으는 계기가 됐다. 박근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제 말을 바꾸며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1년 이상 근무한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임금·수당·상여금 등 모든 조건이 정규직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 고용 불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사용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노동자들을 미리 해고하는 것을 막을 방안도 없다. 이미 곳곳에서 총액인건비제를 핑계 삼아 해고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전문상담사 등 4만여 명은 아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시간제 계약으로 전환하라고 돌봄 교사 등 전일제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처우 개선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호봉제를 요구해 왔다. 1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는 같은 임금을 주는 현행 임금 체계야말로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임금 차별을 구조화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호봉제에 따라 경력과 함께 임금이 올라가는데, 비정규직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반면 정부는 내년에 장기근속가산금을 교자 1만 원 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놔다.

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식비는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된다.

호봉제 도입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전회련학비본부 경기지부의 노동자들이 이를 동안 파업하자 경기도교육청은 미적대던 재량휴업일 유급 보장, 공무원

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등을 약속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때 저들을 물러서게 할 수 있다.

미적대던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 서희자 부지부장은 이렇게 투지를 다졌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놀돈이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가 우선인가 하는 것이다. 가

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소리 없이 학교에서 사라지는 길뿐이며, 싸울 때만 내 권리를 찾아올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는 등 연대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11월 말 국회에서 호봉제 예산과 교육공무직 법안의 내용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은 온갖 차별에 신음해 온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올해도 학교비정규직이 전진한다면 건설, 철도, 삼성전자서비스 등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는 다른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것이다.



사진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싸울 때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다” 호봉제 도입과 고용 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11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

학교비정규직에 연대하는 전교조 교사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정규직 교사들의 연대도 시작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학교가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도 처우는 가장 열악하고, 차별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파업을 앞둔 학교들에서 여러 교사들이 학비 파업의 정당성 알리기, 1인 시위, 지지 현수막 걸기 등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충북 제천여고에서 일하는 한 영숙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교직원들에게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을 담은 동영상과 파업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보고는 많은 교직원들이 ‘정말 비정규직이 1백만 원 받고 일하는 거냐, 자세하게 이야기해

달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충북의 일부 학부모들이 파업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도 도시락을 싸 갔는데 조리원 분들이 파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자신이 도시락을 싸 가는 것이 그 분들의 파업을 응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업에 나서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잘 싸우시라고 격려를 하자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당연한 실천입니다. 전교조가 추구하는 참된 교육, 바람직한 학교를 위해서라도 전교조가 앞장서 비정규직과 연대해야 합니다.”

경기도 어람중학교에서 일하는 김현옥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료 교사들에게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을 알리고 응원 메시지를 받아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같은 학교 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 줬는데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급식 선생님들의 파업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현장에도 수많은 학교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교사들의 차별 문제에 대해 정규직 교사들의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전교조의 연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있다. 11월 29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이복자 울산지부장은 연대를 호소했다.

“파업을 앞두고 학교 앞 1인 시위, 파업을 알리는 현수막 걸기 등을 하려고 전교조에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전교조에

서 적극 지지한다며 함께하겠다고 하더군요.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이 연대해 주니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 파업이 합법인데도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느냐고 비난하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투쟁을 해야 커 가는 아이들도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려 합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적극 응원해 주세요.”

정부는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해 양쪽을 모두 약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할 때 우리의 힘은 강해지고 양쪽을 모두 공격하는 정부에 맞서 더 잘 싸울 수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연대하는 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에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69퍼센트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시정명령을 거부해 박근혜 정부에 제대로 한 방 날렸고, 11월 13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박근혜가 연거푸 물먹는 것을 보니 껌소금 맛이다.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노동자들도 자신감을 얻고 기뻐하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일등 공신은 단연 대다수 전교조 조합원들의 시정

명령 거부 결정이었다. 대다수 조합원들의 저항 의지가 확인되면서 나라 안팎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연대가 광범하게 확산됐다. 이런 상황이 사법부에도 적잖은 압력이 됐을 것이다.

요 한 달 새 전개된 상황은, 우리가 정부·사용자들의 공격에 회피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단호하게 저항할 때 오히려 돌파구가 열린다는 소중한 교훈을 일깨워 준다.

물론 아직 이 싸움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철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 결정으로 된통 물먹은 정부

가 이를 만회하려고 조만간 양강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의 강성우파적 성격을 보건대 결코 쉽게 물러설 정부가 아니다. 따라서 법원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이더라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아닌 게 아니라 법원 결정이 통보된 바로 그날 검찰은 전교조 대선 개입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시간제 교사

그 다음날인 11월 14일에 민주총총 수석부위원장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진영옥

교사가 해임됐다.

고용노동부도 11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출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교사들을 통제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교육 공격을 시작했다. 사실, 이런 교육 공격이 전교조 탄압의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교원평가를 개악해 교사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자사고를 키워 위 엘리트주의 교육을 강화하며,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승인도 모자라 아예 국어·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 국가주의 교육도 강화하려 한다.

특히,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고 저질 일자리가 될 뿐인 시간제 교사를 2017년까지 3천6백 명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따라서 전교조 내의 좌파와 투사 들은 정부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교육 공격에 맞선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비상시국대회(12월 7일) 참가를 적극 조직하는 것이다. 그날은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반민주 폭주에 열받은 노동자들에게 동원 초점이 될 것이다.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린 건설노조 덤프 노동자들

전국건설노조가 11월 28일부터 무기한 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이 지난 6월 28일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하루 만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보증제도를 법제화했지만, 정부가 감시·감독을 하지 않아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 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 원청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안전 관리자나 신호수 하나 없이 긴급 수해 복구 작업 중 이던 15톤 덤프트럭이 전복돼, 운전하던 노동자가 그 자리에서 10센티미터(!) 깊이의 개울물에 빠져 사망했다. 유족들은 산재보험은커녕 보상 한 톨 받지 못했다.

건설 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명분으로 정부는 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건설 노동자들은 상경투쟁을 예고하면서 이런 오랜 요구들과 함께, 특히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의 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화물차량 규제가 문제가 되는 이번에는 경제위기로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건설사들이 그 고통을 건설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덤프차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전국에 있는 덤프트럭 5만 5천 대의 월평균 작업일수는 10~14일에 불과하다. 건설업체들은 덤프 노동자들의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이용해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겨, 정부가 고시한 표준 임대료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덤프 노동자들은 하루 운임에서 기름값,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제하면 10만 원도 되지 않는 일당을 받고 일하면서, 어제는 없는 일자리 때문에, 오늘은 낮은 임대료 때문에 속이 상한다.

건설노조는 2009년부터 정부와 수급조절을 협의하며 덤프트럭이 더 늘지 않도록 조절함으로써 고용불안과 단가인하 압력에 대응해 왔다. 수급 조절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건설사들이 노동자들을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지 못하도록 하는 불가피한 조처였다.

개조 화물 차량

그런데 최근 몇 년간 12톤 이상의 화물차량이 개조를 통해 적재함을 달고 건설 현장으로 유입됐다. 그들이 골재 토사 등 건설자재를 운반하면서 수급 조절의 효과가 무력화되고, 운임 인하 압박이 커졌다. 개조 화물차량은 한 달에 1백50만 원가량의 유가보조금을 받으므로 그만큼 낮은 운임으로 ‘덤핑’을 할 수 있다.

전체 덤프트럭 수의 20퍼센트에 달하는 1만여 대의 개조 화물차량이 건설현장으로 유입되면서 그들과 건설업체들의 계약이 급증했다. 그러자 덤프 노동자들은 더 극심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렸다. 게다가 이들 개조 화물차량은 덤프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종종 비조합원 덤프 노동자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투입돼 파업 파괴자 구실을 하기도 했다.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부는 개조 화물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이것도 태도를 바꿨다.

그래서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골재, 토사 등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과 업역구분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덤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억눌러 온 정부에게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정부는 수급 조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업역구분을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도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요구가 덤프 노동자들과 화물 노동자들을 서로 대립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덤프 노동자들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대부분 비조합원인 25톤 덤프와 개조 화물차 노동자들을 장차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표준임대료를 법제화해서 임대료 인하 경쟁을 부추기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덤프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진정한 주범은, 덤프 노동자들과 개조 화물차량 노동자들의 경쟁을 부추기며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건설업체들과 이들 편에 서서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다.

개조와 과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며 동료 노동자들과 경쟁하도록 내몰리고 있는 개조화물차 노동자들과 덤프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해 싸울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장우성



“더는 정부의 거짓말과 책임회피를 참을 수 없다”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열린 건설 노동자 투쟁 결의 대회.

레미콘 노동자

형편없는 운송료에 연장 수당도 못 받는 노동자들의 분노

11월 14일부터 사흘간 ‘레미콘운송총연합회’ 소속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이 파업을 벌여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 97곳의 차량 3천6백 대가 멈춰섰다.

2000년대 초반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패배를 거듭해 온 레미콘 노동자들이 다시금 투쟁의 기지개를 켜 것이다. 울분 울산의 레미콘 노동자들이 73일간 파업을 벌여 승리했는데 수도권의 레미콘 노동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다. 경제위기로 물가가 치솟아도 8년 동안 운송료(임금)는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해서 가져가는 돈은 한 달에 1백15만 원 남짓이다.

조기출근, 야간작업이 일상이고 24시간 대기하는 날도 많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전혀 받지 못한다. 새벽 4시에 집을 나와 밤 10시까지 일하느라 늘 아이들의 잠든 모습만 보는 안타까움에다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입은 한숨을 더하게 한다.

‘탕떼기’

도급계약서는 이처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노예계약서다. 레미콘 회사들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2008년에 투쟁으로 법제화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거부하고, 여전히 도급계약서를 고수하고 있다.

도급계약서를 쓰면 운반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지만(‘탕떼기’),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대기시간이 포함된 시간당 임대료를 지급해야 해서 건설사 이익이 줄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도급계약서는 업무 중 일어난 모든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노동조합이나 상호회 결성도 금지하고 있다. 사측이 임의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구두 해고 통보도 할 수 있다.

파업 첫날 서울광장에 모인 노동자들은 차량 번호판을 목에 걸고 “적정운송료 지급하라”, “연장수당 지급하라”, “도급계약서 폐지하라”는 요구를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한 노동자는 “형편없는 운송료도, 건설기계 27종 중에 우리만 유일

하게 못 받는 시간의 수당도 도급계약서에 묶여 말을 꺼낼 수도 없었다”며 그동안의 비참한 삶에 울분을 토했다.

파업 이후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며 대기 운송을 거부하고 8시간 준법운행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 노동자는 “준법운행에 동참하는 다른 회사 차량을 만나 서로 손을 마주 흔들 때, ‘우리는 하나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찡해 온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남기도 했다.

기쁘게도 콘크리트 펌프카(레미콘에서 콘크리트를 받아 타설하는 차량) 노동자들도 연대할 뜻을 밝혔다. 준법운행을 하지 않는 레미콘 회사 차량의 콘크리트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장우성

부당 해고에 맞선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11월 21일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울산의 한 영업소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 5명이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1월 20일 해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CJ에서 수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했다. 노동자들은 낮은 수수료와 대리점 소장들의 중간 착복, 온갖 패널티 제도로 고통받아 왔다. 그 때문에 대한통운 출신 노동자들보다 한 달 임금이 50만 원 넘게 적을 정도였다.

CJ와 대한통운의 합병 이후에도 CJ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5월 통쾌하게 “을들의 반

란”을 보여 준 대한통운 노동자들의 투쟁이 CJ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줬다. 대한통운 노동자들은 파업 이후 노조를 만들었다. 이번에 해고된 김형백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5월 파업으로 성과를 얻고 직장에 돌아온 대한통운 노동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단결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 우리는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통운 노동자들이 회사에 항의하니까 선풍기를 들여 놔줍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그런 게 가능한지도 몰랐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울산 지역 CJ 출신 노동자들은 지난 8월 하루 파업을 벌여 수수

료 20원을 인상했고 이들 중 일부는 화물연대 CJ대한통운 택배분회에 가입했다.

그러자 사측이 본보기로 이 중 다섯 명을 해고했다. 해고를 통보한 대리점 소장은 대놓고 화물연대 가입을 문제 삼았다. 노동자들은 해고의 배후에 원청인 CJ 사측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울산 CJ대한통운 택배분회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해 해고 하루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CJ대한통운의 다른 지역 노동자들로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울산 CJ대한통운 백상식 택배분회장에 따르면, “인천 지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은 보통 오후에 끝나는 하차 작업을 오전

11시에 마치는 태업을 시작했고, 광주와 천안 지역 택배 노동자들은 연대를 위한 임시 총회를 합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이런 연대를 보며 “투쟁과 단결이 어떤 건지 알게 됐다”고 말한다. 이들은 해고 철회, 노조 활동 보장, 원청인 CJ 사측과의 직접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CJ와 몇 차례 직접 교섭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CJ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이 투쟁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김지태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병원 노동자의 조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이다

장호중

10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이하 '복지부 대책')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국정조사 보고서')의 후속조처다.

그러나 복지부 대책은 그 제목과 달리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지방의료원을 고사시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민간병원이 제공하지 않는 분야로 한정해 민간병원의 이윤을 지켜주고,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진료를 축소하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지방의료원들이 "의료수익은 낮고, 의료비용은 높[다]"며 이익 창출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재정 적자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복지부 대책은 "인건비 절감, 인력 조정 등 경영혁신 자구 노력 부족"을 첫 번째 문제로 꼽으며 사실상 지방의료원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국정조사 보고서에도 담겨 있었다. 물론 새누리당이 이런 독소조항들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막지 않았고, 결국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도 "재개원 방안 마련"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넣는 데 그쳤다.

이번에 발표된 복지부 대책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관련해 처벌을 이행하도록 할 내용도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오히려 보고서에 담긴 독소조항들만 골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조사 보고서는 진주의료원 전 직 무대행 박근범과 전 관리과장 윤만수를 고발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복지부는, 이들을 앞세워 진

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인 홍준표에게 이들에 대한 처분을 맡겼다.

복지부 대책은 전국적 공공의료 파괴 정책이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다. "조직, 보수 등 규정의 개정 시에는 지자체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단체협상도 뜯어고치려 한다. 이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보고서를 근거로 단체 개악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들도 공격받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공医료를 파괴하는 홍준표,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공공医료를 위해 노동자들이 양보하라'는 민주당식 대안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공공의료도 좋지만 노동자 권리는 무시해도 됩니까?', '어때껏 국회만 바라보고 싸웠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까?' 하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최근 서울대병원 파업 과정에서 보듯 진주의료원 투쟁이 불러일으킨 공공의료 지지 여론은 여전히 광범하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11월 12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으로 국립 지방의료원 설립안을 제안했다.

나백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재개원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설립



분통터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 지난 4월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행진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할 경우 비슷한 문제가 생길 때 적용할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지방정부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 정부가 운영한 사례들이 있다며 한국에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누구나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지방 분권이 공공의료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

붙였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박석운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상임대표도 국립 지방의료원 설립이 지금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한겨레> 김양중 기자도 '대부분의 기자들이 홍준표가 있는 한 재개원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립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국립화는 폐업이 확실시된 시점부터 <레프트21>이 제시해 온 대안이다. 당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일부 단체들은 '홍준표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요구를 채택하길 꺼렸다.

국립화는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 문제를 중앙 정치 무대에 올려놓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광범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공항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난 11월 1일 공항 개항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부분파업을 감행한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반복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비인간적인 차별과 멸시 속에서 쌓여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응어리가 터진 것이다.

"우리로 사람인데, 화장실 바깥에 나오지를 못하게 들들 묶는다", "화장실을 혼자 72간이나 청소한다", "노조를 만들고 나서야 병가·휴가가 생겼다. 그전에는 아픈 사람 병원까지 쫓아와 사직서를 받아 낼 정도였다", "1년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잘리는데, 계약 만료일까지 끝내 계약서를 안 줘서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은 기본급 1백만 원 정도에, 각종 수당을 더해 봐야 1백30만 원 수준이다.

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임금 인상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진짜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파업 집회를 '불법 행위'로 몰고 있다. 공항 경찰대까지 동원해 파업 집회를 해산시키려 하고, 하청업체들에게 조합원 징계 해고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했다. 하청업체들은 집회를 채증하고 징계출석 요구서를 일부 조합원 집으로 보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판례에 비춰 보더라도, 오히려 공항공사의 파업 방해나 대체인력 투입이야말로 '불법 행위'다.

인천공항공사 사측은 '대체인력이 있기 때문에 파업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홍보해 왔다. 파업 효과를 축소해 조합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탑승교(비행기와 공항을 연결하는 통로)의 경우, 지난 두 번의 하루 파업 때 비숙련 대체인력들의 실수로 항공기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항 안에서 노동자 수백명이 집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세계 1등 공항'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노조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예정일에 전면파업에 돌입하려 하자, 공사가 평가일을 파업과 겹치지 않게 급히 하루 당긴 것도 파업의 효과를 반증하는 것이다. 공사는 파업으로 인해 "8년 연속 세계 서비스 1등 공항"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할까 봐 상당히 초조했을 것이다.

"싸우니까 되는구나"

무엇보다 파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졌다. 조합원들은 집단적 투쟁의 힘을 느끼고 있고, "이기고 싶다는 오기도 더욱 강해졌다".

세계공항서비스평가가 있는 날이면 "화장실에 숨어 있어야 했던" 청소 노동자들은 이번에는 투쟁 조끼를 입은 채 일했고, 정해진 업무 외의 요청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다. 협력업체 매니저들은 비조합원만 동원해서 평가를 치러야 했다.

합법적 쟁의권이 없는 지회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도 높다. 김치훈 토목지회장

은 "파업하는 4개 지회가 요구를 쟁취한다면, [다른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전부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투쟁"이라고 말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파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파업을 앞두고 그동안 꿈쩍 않던 인천공항공사가 결국 "하청업체 노사 간 미합의 상황을 전달해 달라"며 협상 의사를 비치기 시작했다.

"처음 파업을 시작했을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협상에 진척이 있다고 하니, '싸우니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기가 오른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항공사가 계속 시간 끌기만 하거나 돌변할 경우 파업을 이어갈 태세다.

노조가 대체인력 투입을 적극 막는다면 업무 마비 효과를 극대화해, 공사를 더욱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은 확대됐 왔다. 바로 얼마 전에도,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4일 동안의 파업과 분사 점거로 평균 23퍼센트(45만 원)의 임금 인상을 쟁취하는 등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인천공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작업장 중 하나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투쟁이 통쾌한 승리를 거둔다면, 처지가 비슷한 노동자들과 투쟁 준비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소은하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새누리당 김한표 등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기업들의 LNG 직수입을 허용하고, 수입한 LNG를 제3자에 팔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LNG 발전에 이미 대거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재벌들이 LNG 수입에까지 나서면서 가스 공급 부문에까지 재벌의 손이 미쳐 민영화가 확대되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가스공사가 경쟁하면 LNG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NG 직수입이 확대되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커진다.

1년 내내 일정하게 소비되는 발전용 LNG와 달리 가정용 LNG는 겨울철에만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 그런데 가스공사가 발전용 LNG 공급을 재벌들에 빼앗기면 겨울철에만 대량으로 LNG를 구입해야 하는 가스공사는 패널티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1월 19일 발표한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시

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조차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가 천연가스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도시가스 가격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가스공사노동조합과 진보진영이 해 온 가스 민영화 비판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가스 노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실질임금 인상 요구도 정당하다.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본 손실에 가스 노동자들은 책임이 없다.

가스공사노조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LNG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가스 요금을 끌어올릴 가스 민영화 법안을 막아야 한다.

강동훈





사진 출처 <소셜리스트 리뷰>



사진 출처 <소셜리스트 리뷰>

▲ 2013년 6월 '파시즘에 맞서 단결하라'(UAF)가 조직한 집회에서 연설하는 웨이먼 베넷.
 ◀ 2012년 9월 영국 파시스트 조직 영국수호동맹(EDL)에 맞서 '파시즘에 맞서 단결하라'(UAF)가 조직한 반파시즘 집회.

반파시즘 운동과 공동전선의 본보기, 영국 반파시즘연합(UAF)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는 최근 호에서 영국 반파시즘 운동이 직면했던 시험대와 그 운동의 전략을 정리한다. 다음은 그 투쟁을 이끄는 활동가 웨이먼 베넷의 글이다. [] 안의 말은 역자나 <레프트21>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보충한 말이다.

영국의 파시스트 거리운동 조직 영국수호동맹(이하 EDL)의 설립자인 토미 로빈슨과 그의 사촌 케빈 캐롤이 EDL을 탈퇴하겠다고 선언(2013년 10월)한 것은 영국 반파시즘 투쟁에 한 획을 긋는 중대 사건이었다. 로빈슨이 지도한 EDL은 1970년대에 활동한 국민전선 이래로 가장 성공적인 파시스트 거리운동 조직의 하나로, 유럽 전역에 EDL을 본따 생긴 “수호동맹”이 여럿 있다. 로빈슨의 탈퇴는 EDL의 종말을 뜻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일에 앞서 영국의 파시스트 정당 영국국민당(이하 BNP)이 선거에서 참패를 겪었다.[EDL과 BNP는 각각 거리운동과 제도권 정치 참여를 맡는 역할 분담 관계라 할 수 있다.]

영국 파시스트의 선거 조직과 거리운동 조직을 꺾은 세력은 단체명이 ‘파시즘에 맞서 단결하라’라는 반파시즘 연합(이하 UAF)다. UAF는 BNP가 선거에서 약진한 것에 대응해 2003년에 창립됐다. UAF 창립의 배경에는 파시스트들의 전략 변화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UAF에 앞서 매우 성공적으로 활동한 반파시즘 운동 단체 반나치동맹(이하 ANL)은 파시스트에 도전하고자 1970년대에 결성됐고 이후 1990년대에 재결성된 단체로, 당시의 파시스트 운동 상황을 반영했다. 1999년에 BNP의 지도자가 된 닉 그리핀은 프랑스의 장 마리 르펜이 이끈 국민전선(이하 FN)의 성공을 모방해 BNP를 유러파시즘 정당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르펜은 FN의 강파 이미지를 버리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수용해, FN을 프랑스 공식 정치에 안착시켜 선거에서 여러 차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유럽 다른 나라에 있는 파시스트 단체들은 르펜이 거둔 성공을 오랜 정치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봤다.

그리핀은 영국에서도 프랑스처럼 돌파구를 만들려면 “3H”를 버려야 한다고 자

기 지지자들에게 강조했다. 그는 “3H”를 “호비리즘(Hobbyism), 거친 언사(Hard talk), 히틀러” — 즉, 사제폭탄 제조, 인종차별적 언사, 히틀러 숭배 — 라고 규정하며, 과거의 스킨헤드[이민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과격한 인종차별주의자] 강파 이미지와 거리를 두려 했다.

그리핀의 변화는 영국의 파시스트 운동이 좌파에게 패배했다는 점뿐 아니라, 인종차별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점도 인정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망명 신청자에 대한 편견과 이슬람 혐오가 인종차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됐고, “생물학”을 바탕으로 한 인종차별은 점점 외면당했다.

인종차별

1930년대와 1960년대에 주류를 이룬 유대인 차별과 흑인 차별은 더는 용인되지 않았다. 심지어 극우파들도 더는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정치를 공개적으로 옹호할 배경이 없었다. “통속적 인종차별”을 대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태도는 이전과 상전벽해라 할 만큼 완전히 달라졌는데, 특히 미국의 공민권 운동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격리 정책에 맞선 투쟁을 거치면서 그렇게 됐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국민 정체성”을 운하는 새로운 담론이었다. 즉, “외래” 문화가 영국 문화를 집어삼킨다는 것이었다. 언론이 이 새로운 인종차별을 그럴듯한 것으로 보이게 했고, 정치인들도 여기에 영합했다. 이로써 그리핀과 파시스트들은 재평가를 받았다. BNP는 자신들이 인종차별적 정당도 아니고, 백인의 “인종적 우월성”을 믿지도 않으며, 그저 위태로운 지경에 놓인 영국·기독교·북유럽 문화의 독자성을 수호하고자 할 뿐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BNP는 유럽연합 의회 선거와 런던광역시 선거를 정치적 돌파구로 봤다. 비례대표제 덕에 소수 정당도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핀과 그의 동맹자 앤드루 브론즈는 유럽연합 의회와 시의회 의석을 얻어 공식 정치로 진입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BNP는 자신들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잉글랜드 북서부지방, 요크셔, 런던 동부지구 같은 지역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 지역들은 실업, 심각한 주택 부족, 점증하는 빈곤으로 고통받는 곳이었고, 소수자들이 눈에 띄는 곳이기도 했다.

BNP는 이처럼 전통적으로 노동계급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지만 산업이 쇠퇴하는 곳에서 성과를 얻었고, 노조가 약화하고 노동당 득표가 하락한 지역을 주의 깊게 표적으로 삼았다. UAF를 결성한 것은 변하는 상황에서 반파시즘 투표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BNP의 성장

2001년 총선 이후 BNP는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강력해졌다. 2009년 그리핀과 브론즈가 유럽연합 의회 의원이 되고, 2008년 리처드 반브룩이 런던광역시 의회 의원이 되고, BNP가 영국 전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배출하면서 그 기세가 절정에 이르렀다. 말 그대로 눈부신 성장이었다. BNP는 공식 정치의 일원이 됐고, “점잖은” 정당을 자처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BNP를 막을 수 없게 됐다거나, BNP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BNP 지지층 일부를 되찾아오려면 “[영국인의] 정체성 개념을 더 발전시켜 파시스트가 내세우는 것보다 더 영국적인 정체성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UAF는 이런 주장에 반대해 대중적 ‘인종차별 반대 투표’를 조직해야 하고, 이것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이라는 대부대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AF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ANL과 [1970년

대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음악 축제인 ‘록 어게인스트 레이시즘’이 활동하던 시기에 성장한 노조 지도자층이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우편노동조합(CWU)의 빌리 헤이스, 소방수노동조합(FBU)의 앤디 길크리스트와 믹 쇼 등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지도적인 직장위원이었고, 그때 이래로 저명한 노동운동가로 떠오른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공무원노조(PCS)의 마크 서워트카, 교사노조(NUT)의 크리스틴 블로우어와 케빈 코트니 등 크고 작은 노조의 지도자들이 UAF를 지지했다. 운송일반노조(TGWU) 지도자와 스페인 내전 참전 재향군인 잭 존스 등이 UAF 창립총회에서 연설했다. 노동조합은 반파시즘 운동의 일부였고, 파시즘에 맞선다는 매우 중요하고도 오랜 전통을 대표한다.

노조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은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자 수백만 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고, 노조의 재정 지원 덕분에 UAF는 파시즘에 반대하는 선거 유인물 수백만 부를 배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슬람교 사원, 교회, 지역운동 단체 등과도 관계를 맺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런 단체들과 연계가 없다면 접근할 수도 없었을 지역·사람들과 매우 광범하게 접촉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 등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의 지지도 받았다.

UAF의 활동가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반파시즘 주장을 알리고 지역 곳곳에서 운동을 벌이는 등 중요한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 스톡, 번리, 맨체스터를 비롯한 수백여 곳에서 UAF 지역 단체들은 체계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그 지역의 파시스트가 누군지 찾아내 폭로했다.

BNP가 소규모로 지역 유세를 하든 ‘질 시간’이라는 전국적 TV 프로그램에 그리핀이 출연하든, UAF는 BNP가

나타나는 곳마다 공개적 항의 행동을 벌였다. 우리는 그들을 파시스트라고 짚어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BNP가 점잖은 정당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깨뜨리는지를 이해하게 됐다.

우리의 두 번째 전략적 강점은 반파시즘 운동의 문화적 날개인 ‘러브 뮤직 헤이트 레이시즘’(LMHR)에서 나왔다. 유명 연예인들이 언론과 음악 관련 출판물에서 BNP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우리는 술집과 대학 캠퍼스에서 음악 공연을 수백 차례 열었다. BNP가 강력한 스톡온트렌트 시 같은 곳에서 반파시즘 축제를 열고,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분출한 적 있는 런던 동부의 빅토리아 파크에서 대규모 축제를 개최했다. 파시스트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단지 거리에 서만 반대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마음속에서도 밀리게 됐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형세가 BNP에 불리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원칙

우리 운동 안에는 파시스트들과 논쟁하는 것이 그들을 폭로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우리는 이런 주장에 반대해, 파시스트들이 사상을 전파하거나 자기 주장을 설명할 기회를 결코 주서는 안 된다는 “[파시스트를 위한] 연단은 없다”는 정책을 주장했다. 우리는 나치가 그저 독특한 생각을 하는 일부 주류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민자 문제에서는 양보해서 BNP의 기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파시즘 운동 안에 있었다. 예컨대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파시스트들과 마찬가지로는 식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주장에 반대해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이 무슬림 탓이 아니고, 영국에 “이민자가 득실대는” 것도 아니며, 예씩

▶ 9면으로 이어짐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적잖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를 파시즘이라고 본다. 다른 사람들은 어버이연합과 일베가 파시즘이라고 말한다. 물론 미래 한국에서 출현할 파시스트 운동은 이런 우익들 중 다수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재벌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구우익이거나(박근혜 정부), 기존 국가기구의 조종을 받는 사기 저하된 노인들의 관변단체(어버이연합)나 혐오스럽고 짜질한 말들만 배설물처럼 쏟아 내는 넷우익(일베)을 파시즘으로 보는 것은 부정확한 개념이다. **최일봉**이 왜 그런지 설명한다.

파시스트들은 단순한 극우가 아니다. 단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인 것만도 아니다. 단순히 소수자와 좌파에 대한 사악한 폭력과 혹심한 탄압을 자행하는 권위주의자들인 것만도 아니다. 파시스트들은 협소하고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조차 파괴하고,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노동계급 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들은 선거를 폐지하고 싶어하고, 사회 대다수가 누려 온 자유를 전면 공격하려 한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활동한다. 히틀러는 아우슈비츠라는 대량 살인 공장을 지어 유대인 6백만 명을 도살했다. 파시즘은 중간계급 대중에 기반을 둔 독특한 정치 운동이다. 물론 소수 대자본가 개인들이 파시스트 정당을 지지해 자금을 제공하곤 했다. 또, 파시스트 운동이 노동계급의 후진적인 인사들을 일부 포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직 노동계급 운동의 상당 부분을 포섭한 적은 없다. 파시즘의 주요 지지 기반은 언제나 중간계급이었다. 중간계급은 매우 모순된 계급 지위와 사상이 그 특징이다. 그들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에서 동요하며 심각한 위기 때 양쪽 모두를 비난하며 오락가락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효과

들 때문에 삶이 망가지지만 그에 맞서 싸울 조직은 없는 각종 자영업자들(소기업주, 농민, 소상공점 주인 등)과 조직되지 않은 관리직·전문직 종사자들(중간관리직 공무원, 많은 변호사와 의사 등)은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 힘도, 대기업 주들의 경제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들의 인생은 심각한 경제 위기와 대량 실업으로 망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은 대자본가를 원망하지만, 또한 노동자들도 원망한다. 특히 노동조합과 좌파를 증오한다.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에 더욱 끌린다. 이때 파시스트들이 이들의 절망을 표현하는 기치를 제공하고 이들의 분노를 돌릴 속죄양을 가리킨다면 대중적 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 파시즘 운동은 중간계급의 이러한 매우 모순된 처지와 사상의 정치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권위주의 정권이 모두 파시즘인 것은 아니다. 박정희 정권도 파시즘은 아니다. 임지현 교수는 박정희의 ‘대중독재’론을 주장하지만, 박정희는 중간계급 대중 운동을 구축하지 않았다.(새마을운동은 국가가 통제한 관치 캠페인으로, 포퓰리즘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박정희는 데마고기(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정치적 허위 선전)로써 재벌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벌을

옹호했다. 좌파적 미사여구는커녕 일본 메이지 유신식의 이데올로기로 통치했다. 나치당의 정식 명칭이 독일사회주의 노동자당이고, 아우슈비츠 정문에 걸린 표어가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인 것과 비교해 보라. 박정희는 또, 비록 어용이지만 한국노동총이라는 노동조합 기구도 존속시켜야 했고, 국회의원 선거도 허용해야 했다. **대량 살인 공장** 파시스트들이 중간계급 불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대상이 꼭 유대인인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파시즘은 독일 파시즘(나치)과 달리 유대인을 속죄양 삼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날의 파시스트들은 대부분 무슬림을 증오한다. 그러나 모든 인종차별적 정당이 파시스트인 건 아니다. 미국 공화당은 유색인종과 무슬림을 천대하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지만, 파시스트는 아니다. 공화당은 중간계급이 아니라 대자본가들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대중 운동도 아니다. 또한, 모든 민족주의 정치세력이 파시스트인 것도 아니다. 자유주의적 세계시민주의자들이나 일부 좌파파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난하는 좌파 민족주의자들을 파시스트로 매도하는데,



신승호 (가운데) / 서울신문

“파시즘은 반혁명적 절망의 당” 영국 파시스트 조직 EDL의 강패들.

노동계급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인 이들이 나치와 비슷한 성격의 세력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이슬람이 파시즘이라는 생각도 터무니없다. 이슬람주의(정치적

급진주의 이슬람)에 한정해 살펴보더라도 헤즈볼라나 하마스 등을 히틀러나 무솔리니에 빗대는 건 아무래도 우습다. 이 글은 필자가 2006년에 썼던 글들인 **상황에 비춰 조금 수정한 것이다.**

▶ 8면에서 이어짐

스에 지어지는 새 집들을 아프리카인들이 죄다 차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장은 BNP가 제기한 수많은 터무니없는 주장들 중 하나다.) 무슬림 악마화에 말려들어, 테러 행위에 책임이 있는 무슬림들은 나치와 마찬가지로 주장하거나, “이슬람적 사고”나 “이슬람 문화”에 파시즘과 유사한 것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파시즘 운동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모두 거부했다. 테러를 저지르는 개인(이유가 무엇이든)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계급 조직을 분쇄하고 홀로코스트 같은 참상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운동은 서로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파시즘 운동의 일부가 되는 데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았다는 점도 매우 중요했다.(물론 여러 쟁점을 놓고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일쑤였지만 말이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민 등의 문제에서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동맹을 유지하는 데서 이 원칙은 사활적으로 중요했다. 우리의 목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정서를 조성하고, 파시즘에 맞서는 데 필요한 주장으로 운동을 무장시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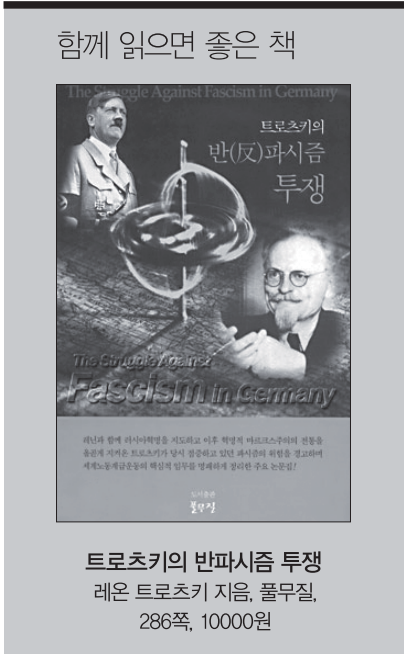
전술

우리는 나치 조직을 부수려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했다. 《파시즘은 무엇이고 어떻게 맞설 것인가》라는 저서에서 트로츠키는 도축당할 처지에 놓인 소의 비유를 들었다. 도축업자가 칼을 갈고 있는 와중에 어떤 소들은 자기 운명이 이렇게 된 책임이 일부 소들에게 있다고 탓했다. 그때 소 한 마리가 외쳤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이 도축업자를 뿔로 받아 버리자.” 이것이 공동전선의 정신이다.

파시스트 조직은 그 본성상 두 가지 전술을 구사한다. 가능한 수단을 무엇이든 동원해 자신들의 견해를 대중에 퍼뜨리고 정치적 의제를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 전술이다.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전술] 목표는 노동계급 운동에 맞서 그것을 분쇄할 수 있는 거리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이 파시스트 운동이 다른 극우 정당과 다른 점이다. 지금이야 BNP와 FN이 점잖은 세력으로 보이려고 “정장 입은 나치” 행세를 하지만, 때가 되면 거리를 장악하려 들 것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거리로 돌아가기 위한 전 단계 전략으로 지지자 수를 늘리고 대중에게 존경을 받으려는 행동이다. FN을 막아 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FN은 프랑스 거리를 장악할 것이다. 헝가리의 신나치인 조빅당은 ‘헝가리 수호단’을 건설하고 있는데, 거리를 장악하고 헝가리에 사는 로마인들을 공격하는 데서 대중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다. 이것이 2009년 EDL이 결성되면서 영국에서도 개발하기 시작한 전술이다. BNP의 선거 출마 전략이 반파시즘 운동에 꼭 틀어막히면서, 파시스트의 일부가 거리로 돌아온 것이었다. 처음에 EDL은 아무도 EDL이 뭘지 몰랐다는 점 때문에 득을 봤다. EDL은 홀리건, 조직된 인종차별주의자, BNP 당원인 로빈슨 같은 나치 일부가 느슨하게 묶인 단체였다. EDL은 이슬람 혐오가 먹히는 상황, 즉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재앙적인 전쟁이 일어난 이후 무슬림에 대한 악독한 인종차별이 판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EDL은 소규모 난동을 피우며 루터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쓴 강패 5백여 명이 몰려다니며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다. 경찰은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EDL 지도자들은 체포되지 않았다. 강패들의 난동이 “용납되는” 듯 보였다. 루터 사태 이후 경찰은

전국을 돌며 지방 의회에 EDL이 “인권 단체”라는 조언을 하고 다녔다. EDL은 스톡, 더들리, 버밍엄 같은 곳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EDL의 시위는 수백 규모가 아니라 수천 규모였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밀렸다. 스톡온트렌트 시에서 EDL이 일으킨 폭동은 경찰도 압도했다. 이런 폭동에는 군복 입은 군인도 몇 명 동참했다. “우리는 원하면 어디든 간다”가 EDL의 구호였다. 크고 작은 모든 도시가 그들의 목표였다. 정부는 EDL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도시 전체를 폐쇄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우리는 도시를 개방하려고, 또 도심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투쟁했다. EDL은 “시위”를 벌일 지역에서 미리 “인종 청소”를 벌였다. 한나절 정도라 할지라도 말이다. 무슬림과 흑인 등 EDL이 보기에 “영국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꼭꼭 숨어 있으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무슬림들이 EDL에 맞서는 시위를 일절 조직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을 겨냥해 만든 ‘예방 대책’을 이용했다. 아시아계 청년들은 반파시즘 시위에 참가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서를 받았고, UAF의 활동가들은 체포 위협을 받았다. 나도 셀 수도 없이 많이 체포당했다. 우리는 온갖 비난을 들었고, 우리를 막기 위해 여러 곰수가 동원됐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 EDL의 행진이 도전받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 우리는 “그들이 통괄하게 놔두지 말자”를 구호로 삼았다. 히틀러는 파시스트 거리 운동이 “보잘 것없는 인간”에게 “강력한 용”의 일부라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토미 로빈슨이 말한 것처럼, EDL 시위는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EDL은 처음에는 “소수 무슬림 극단

주의자들”에만 반대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모든 무슬림을 노린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EDL이 인기를 얻을수록 인종차별이 전반적으로 되살아났다. EDL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노렸다. EDL은 노조 사무실과 좌파 서점을 공격했고, 파업 대열에 가서 행패를 부렸다. ‘점거하라’ 운동을 공격했고, 학생운동에 반대했고, [2011년] 여름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 청년이 사망하면서 소요사태가 발생한] 런던 북부 지역에 가셔도 [흑인 청년들을] 공격하려고 했다. **이데올로기** EDL이라는 거리 운동이 전통적 파시스트 조직으로 새로 태어나고 있음은 명백했다. 그리고 EDL이 정치 이데올로기와 선거 전략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는 점도 명백했다. EDL에 맞서는 것은 UAF에 중요한 과제가 됐다. 2010년 총선에서 BNP가 참패해 바킹과 대거넘 지역에서 그리핀이 굴욕을 겪고 지방의회 의석 다수를 잃어버린 이후로는 특히 그랬다.



지금까지 UAF는 EDL에 맞서 맞불 시위를 2백50회 넘게 조직했다. 더들리, 블랙폴, 프레스턴 같은 곳에서 벌인 시위는 흔히 고립된 소수 무슬림들을 지지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는 EDL이 시위를 벌일 때마다 그들을 방해해 고립시킬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으로는 [맞불 시위 조직을 통해] EDL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 활동할 강력한 지역 조직을 건설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전투가 지구전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전장을 신중하게 골랐다. 그러자 EDL 지도부는 자기들의 힘을 과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타워햄리츠에서, 특히 화이트체플 가에 있는 런던 무슬림 센터를 향해 행진하려 했다. 우리는 타워햄리츠에서 맞불 시위를 조직하며 두 가지를 목표로 삼았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EDL이 그 지역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시위가 엄청나게 대규모로 열려서 우리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시위의 둘째 목표는 파시스트들에게 역사적 상징성이 특별한 런던의 동부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이곳은 1936년 오스월드 모슬리의 검은셔츠단이 패배한 바로 그 지역이다. 타워햄리츠의 훌륭한 거리 시위, 월섬프레스트 거리에서 우리가 거둔 대규모 승리는 EDL의 패배를 결정지었다. EDL은 이 패배를 극복하지 못했다. UAF가 지난 몇 년에 걸쳐 이룬 성과는 공동전선 전술이 옳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트로츠키가 썼듯이 “대중운동으로서 파시즘은 반혁명적 절망의 당이다.” 우리는 긴축, 삭감, 점증하는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다. 파시즘 정당이 재건돼 다시 부상하기 좋은 시대라는 것이다. 우리 운동도 방심하지 말고 강력하게 유지돼야 한다. 번역 김준호

황금새벽당의 성장을 막는 것은 가능하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가 그리스의 반자본주의 정당 안타르시아 소속의 아테네 시의원이자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의 전국 소집자인 페트로스 콘스탄티누(아래 왼쪽 사진)를 인터뷰했다.



사진 출처: Giorgos Panagakis

지금 그리스에서 황금새벽당의 동향과 반파시즘 운동의 근황은 어떠한가?

9월 18일 힙합 가수 파블로스 파사스가 살해된 뒤에 신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과, 황금새벽당을 비호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9월에 신나치들은 노조 활동가들을 겨냥해 노동계급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일련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와중에 파블로스가 살해된 것입니다. 황금새벽당은 이런 공격을 통해 테러할 대상을 그 지역의 노동계급 전체로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술은 완전한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파블로스가 살해된 바로 그날에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이하 KEERFA)은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고,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모아 아테네에 있는 황금새벽당 중앙당사로 행진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한 이 시위는 그리스 최대 공공부문 노조가 지지하는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는 그동안 그리스에서 일어난 반파시즘 시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시위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의 압력을 받은 집권당인 신민주당은 신나치를 보호해 주던 것을 멈추고 신나치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급진좌파 정당인 시리자는 시위를 조직하는 데 반대하며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거기에는 1백 명밖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황금새벽당을 강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위에 대한 대응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 수호 집단들 사이에서 황금새벽당의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신민주당은 황금새벽당을 대하는 방식을 두고 분열했습니다. 한 분파는 나치들과 더 개방적으로 협력하며 나치를 정부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른 분파는 이런 접근법에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대중적 반파시즘 운동이 발생하자 황금새벽당을 정부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생각이 힘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황금새벽당을 공격할 계획이 없었지만, 시위가 터져 나온 이후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황금새벽당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황금새벽당은 온건해 보이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라파시스트가 아니라 뻗속 깊이 나치입니다. 그리스에서 황금새벽당의 지지도는 얼마나 됩니까?

황금새벽당은 정부가 건축 정책을 도입한 이후 발전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사진 출처: 그리스 언론 (소셜리스트 운동)

신나치의 발흥을 막을 진정한 동력은 광범한 노동자 공동전선 2013년 1월 19일 아테네에서 열린 반파시즘 시위.

서 득을 봐, 선거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우파 신민주당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PASOK) 모두 몰락했습니다. 두 정당의 득표는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덕에 황금새벽당처럼, 부패한 정치를 단죄하겠다고 말하는 인종주의적 메마고그들[거짓말을 유포해 대중을 선동하려는 자들]이 설칠 공간이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황금새벽당은 선거에서 얻은 지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돌격대”를 만들고 공포를 확산시키려 애썼습니다. 황금새벽당에는 몇 년에 걸쳐 형성된 나치 중핵이 있습니다. 황금새벽당의 지도자 격인 나치 중핵은 강경책을 추진했고, 정부와 경찰이 자신들에게 정치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보며 전국에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황금새벽당은 이주민과 노동조합과 좌파를 공격하려고 아테네의 도심에 지지 기반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국적 수준에서도 같은 일을 해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대중적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총선 이후로 각 지역에서 전투적인 반파시즘 시위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반파시즘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10만 명 정도 됩니다.[그리스 전체 인구는 1천80만 명 남짓밖에 안 된다] 그 뒤를 이어 1월 19일에는 “반파시즘 도시 아테네”를 열망하는 거대한 저항의 물결

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은 얼마 동안 힘 있게 성장했고, 황금새벽당을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황금새벽당의 9월 공세가 재앙으로 끝난 것입니다.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은 무엇을 정치적·조직적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까?

KEERFA는 공동전선 전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전선 전술의 핵심에는 민주적이고 급진적인 세력들이 모두 신나치에 맞서 단결하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신나치가 거리 행진을 벌이며 인종차별적 독극물을 퍼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2008년 건축에 항의하는 첫 번째 물결이 일었습니다. 우리는 이듬해인 2009년에 KEERFA를 결성했습니다. 그리스가 심대한 경제 위기로 빠져들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인종차별을 부추기며 이제 시작된 위기와 반건축 저항운동에 대처했습니다.

정부는 수용소를 새로 짓고 거리에서 대대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이주민을 겨냥한 인종차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파시스트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KEERFA가 결성됐을 때 많은 노조 활동가와 좌파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하게는 10년 전 반전 운동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줬던 파키스탄 출신 이주민들이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혐오와 인종차별적 공격에 맞서는 저항의 선두에 섰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이주민이 KEERFA에 참여하자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도 KEERFA에 가세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계속해서 황금새벽당을 공격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계속 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실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절망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황금새벽당이 다시 일어서는 통로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황금새벽당을 공격하는 동안 그리스 경찰은 로마인 거주지를 급습해서 이른바 “금발 요정”이라고 부르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급습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금발 요정” 사례를 보면, 그리스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좀 더 광범한 추세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정점은 최근 람페두사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 있습니다. 얼마 전 람페두사에서는 이주민 4백 명이 억사했습니다.

람페두사는 이탈리아의 섬으로, 유럽에 들어오려는 이주민들이 거쳐 가는 장소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Eurosur”(유럽 국경관리 시스템)라고 불리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이주민들이 탄

배를 가로막기 위해 기획된 해상 감시 시스템입니다.

람페두사를 방문한 그리스 총리 안토니스 사마라스는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연합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람페두사에 가려다 목숨을 잃는데, 그 이유 하나는 그리스 정부가 터키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에브로스에 50킬로미터에 이르는 울타리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은 바다를 건너는 위험한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둘째 정점은 “금발 요정”과 관련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에 로마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경찰은 마약 거래 등에 연루된 “범죄자”가 로마인들 사이에 득시글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로마인 거주지를 급습했을 때 범죄 증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경찰관이 금발의 소녀를 발견하고는 그녀가 유괴됐다고 의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로마인들의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지, 절대 “금발”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유괴된 것도 아니고 생모가 “팔아 버린”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종차별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 13면으로 이어짐

국민전선의 성장과 프랑스 좌파의 과제

실베스트르 자파르

6월 5일 반파시즘 활동가이던 클레망 메리크가 나치 폭력배의 손에 살해당한 사건은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최근 몇 년간 나치 폭력배들이 무슬림, 성소수자, 좌파 활동가들을 수없이 공격했지만, 오로지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소수 사람들만 이를 심각하게 여겼다.

이와 대조적으로 클레망 살해 사건은 대서특필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민을 느끼며 행동에 나섰다. 이 사건은 국민전선(이하 FN)의 파시스트 본질을 다시 밝혀 줬다. 지난 몇 년 동안 FN이 전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2012년 대선에서 FN의 후보는 17.9퍼센트를 득표했는데, 창당 사상 최대 득표였다. 내년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FN이 약진하리라는 예측도 있다.

당대표가 늙은 골수 파시스트 장 마린 르펜에서 그의 딸 마린 르펜으로 바뀐 것이 FN의 숙원인 ‘탈악마화’ 전략에 도움이 됐다. 마린 르펜은 유대인을 배척하거나 인종간 불평등을 분명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이슬람 혐오와 실용적 관점을 강조하는 젊은 당원들을 곁에 뒀다.

국민전선의 정체성

그럼에도 FN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FN의 후보자들이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양 인종차별적 발언들을 마구 쏟아 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FN이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FN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된 더 선명한 나치들이 자신감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쉽게도 좌파는 FN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마린 르펜이 당대표가 된 뒤로는 FN이 반동적이긴 해도 ‘정상적인’ 정당이라는 생각이 광범하게 퍼졌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무엇보다 집권당인 사회당 뿐 아니라 좌파전선의 전락에도 스며들었고, 심지어 반자본주의신당(이하 NPA)의 일부도 오염시켰다.

FN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보는 시각이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례는 2012년 좌파전선의 대선 후보였던 장뤼크 멜랑송의 전략이다.

멜랑송은 FN이 특별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FN의 대표와 논쟁하는 방식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파전선의 [지난해 대선] 거리 연설에는 멜랑송 후보를 지지하는 수만 명이 참가했지만, 좌파전선은 FN에 반대하는 거리 운동을 벌이는 것을 반대했다. 대신 좌파전선은 멜랑송과 마린 르펜이 맞붙는 TV 토론을 열자고 주장했다.

그 결과, 파시즘에 맞선 투쟁은 마치 멜랑송과 르펜 두 개인의 논쟁처럼 비쳐졌고,

활동가들은 수동적으로 그 논쟁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반파시즘 운동을 이끄는 것은 혁명가들의 과제가 돼야 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NPA는 지난해에 FN에 맞서는 시위를 벌이자고 호소했고, 올해 9월에도 마르세유에서 시위를 벌이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반파시즘 세력을 강력하게 재건하는 데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첫째 장애물은 간단히 말해 반파시즘 운동 자체가 침체해 있다는 점이다. 클레망이 살해당하기 전까지 활동하던 반파시즘 단체는 소규모였고, 그들 중 많은 단체는 아나키즘 성향을 띠었다. 그래도 이들은 파시즘에 맞서 싸웠고, 그래서 NPA도 그들과 함께했지만, 광범한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논쟁해야 할 쟁점이 많았다.

장애물

둘째 장애물은 NPA 자체와 관련 있다. 문제는 여러 가지다. NPA는 분열을 겪은 후 현재 약해졌다. NPA는 느슨한 구조 때문에 응집력 있고 집중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시작하거나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NPA 내에도 주로 이데올로기적인 방식으로 FN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수용하는 부류가 어느 정도 있다. FN과 직접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령과 우리의 강령을 대립시켜 보여 주는 방식으로 싸우자는 것이다.

그러나 클레망 살해 사건을 보며 NPA를 비롯한 좌파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클레망 살해 사건 이후 일어난 시위 규모는 상당했다. 6월 23일에도, 9월 14일 마르세유에서도 수천 명이 시위에 참가해 행진을 벌였다.

많은 곳에서 노동조합, NPA, 아나키스트 그룹, 좌파전선 등 다양한 경향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반파시즘 지역위원회가 꾸려졌고, 지역위원회들은 자기 지역에서 항의 행동을 벌이고 있다. 아직 나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한참 모자라지만 중요한 전진이다.

최근 정부가 로마인 학생을 강제추방한 것에 반대해 고등학생들이 벌인 운동은 밝은 희망의 불씨를 보여 줬다. 비록 학생들의 시위가 사회당 정부를 향한 것이긴 했지만, 오래된 반FN 구호인 “F는 파시스트, N은 나치”도 다시 들려왔다.

좌파 조직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이런 청년들과 연계를 맺을 수 있다면, 좌파들이 거리와 작업장과 학교와 대학에서 나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강력한 운동이 일어날 잠재력은 크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3년 11월호 / 번역 정다운



사진 출처 Philippe Soussen (플리커)



사진 출처 Siobhán Silke (플리커)

▲ 정부의 인종차별 선동에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 준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10월 17일 시위.

◀ 2011년 ‘니킵 착용금지법’이 제정된 뒤 니킵 착용을 이유로 연행되는 무슬림 여성 —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 추진은 파시스트가 성장하는 좋은 토양이 됐다.

▶ 12면에서 이어짐

반파시즘 운동이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반파시즘 운동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KEERFA]는 내년 3월 22일에 거대한 시위를 조직할 것입니다. 이 시위는 유럽 전역에 걸친 행동의 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학생, 모든 좌파 투사들의 단결을 건설해 거리에서 파시스트를 막아야 합니다. 최근 황금새벽당은 수감된 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전국 동원 시위를 아테네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가 4백 명밖에 되지 않아 낭패를 봤습니다. 같은 날에 우리는 맞불 시위를 조직했는데 경찰의 방해가 심했는데도 2천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나치들을 고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리자는 이 시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KEERFA는 분명한 반파시즘 공동전선 전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민주당은 원내정당들이 신나치에 맞서 이른바 “헌법이 보장하는 영역”으로 모아지고 합니다. 이처럼 그들도 대중운동의 압력을 받아 황금새벽당에 맞설 방안을 나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황금새벽당을 불법화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조금 지갑을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격대의 근거지인 그들의 사무실도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황금새벽당이 테러방지법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좌파를 막으려고 제정한 법이자, 노동자들의 점거 투쟁과 피켓

팅 등을 제약하려고 제정한 법입니다.

아쉽게도, 국회의원이 많은 시리자는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한 두 명 중 한 명은 독일이 그리스를 점령했을 당시 아크로폴리스에서 나치의 깃발을 끌어내려 영웅이 된 인물입니다. 시리자는 파시스트에 맞서는 맞불 시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KEERFA는 파시스트들에 맞서는 맞불 시위를 조직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왜 그리스 정부는 당신을 비롯한 KEERFA의 주요 활동가들을 기소했습니까?

정부는 우리의 성명서 내용을 이유로 세 건의 재판에 우리를 기소했습니다. 첫째는 “대중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것”,

“그리스의 국제관계를 손상시킨 것”, “국가, 군대, 통화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것”,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등입니다. 이 중 두 가지는 국가정보국이 제기한 것인데, 우리가 알바니아인 두 명을 [현장에서 즉결] 처형한 경찰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주민 수용소에서 일어난 반란을 지지한 것을 이유로 기소된 재판입니다. 셋째는 황금새벽당의 변호사가 반자본주의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의 기사를 고발해 열리는 재판으로, 12월 12일에 재판이 열립니다. 그 변호사는 KEERFA가 그를 “파시스트의 조력자”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고, 노조를 비

롯한 많은 단체가 재판을 열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이 열려 유죄 판결이 나오면 우리[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는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고 아마도 감옥에서 몇 개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신문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심각한 혐의가 씌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맞서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격은 우리를 겁먹히려는 시도고, 국가에 대한 우리의 비판과 나치에 맞선 우리의 운동을 멈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싶어 합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3년 11월호 / 번역 이진화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나, 바람직하지도 않다

김영익

김정은 집권 후 북한 정부는 경제정책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는 듯하다. 이 변화의 핵심은 각 생산단위의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제개발구·특구 개발로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다. 김정은식 시장 개혁·개방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의 핵심은 북한 정부가 2012년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6·28 방침'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또는 '새로운 경제관리조치'라고 불린다고 한다.

북한 정부는 6·28 방침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 다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기사를 통해 북한 경제정책에서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는 있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이번 [새 경제]조치에 의해 공장들에서는 국가계획을 수행하면서도 여러 대상들과 자체의 결심으로 생산계약을 맺을 수 있다." 즉,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한 것"이다.

지난해 7~8월 북한 정부가 곳곳에서 강연회를 열어 6·28 방침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 설명 내용을 종합하면, 공장 기업소들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 방법, 수익과 분배도 자체로 정하게 된다. 그리고 생산설비 및 자재, 연료와 전력 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들이나 탄광, 발전소들과의 거래를 통해 스스로 구입해야 한다.

농업분야에서도 농민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9월 방북한 일본 기자들에게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교수는 "농민이 목표를 초과한 잉여수확분을 처분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북한 정부는 경제특구를 대폭 늘리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북한이 새로 만든 경제개발구·특구만 전국적으로 14곳에 이른다. 북한 관료는 이런 경제개발구·특구를 통해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최근 마식령스키장 등 관광시설 건설에 신경을 많이 쓴 것도 해외 자본 유치와 관련 있는 듯하다.

빈부격차

이런 변화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1980년대 초 중국이 단행한 수준의 시장 개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김연철 교수(인제대)는 "시장을 비롯한 현재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중국의 1980년대 수준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보수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김정은의 경제 개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예컨대 보수적인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는 시장 개혁으로 북한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으므로 "세계는 북한식 개혁 프로그램의 제한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북한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관료가 시장 개혁에 나선 것은 북한 노동계급의 고통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시장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삶이 희생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1989년 동구권 붕괴 후 동유럽에서 진행된 시장 개혁·개방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시장 개혁·개방으로 동유럽 노동자들은 생활수준이 하락했다. 오히려 실업률 급증, 사회복지 폐지나 축소 등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과거에 북한 관료가 시도한 시장 개혁 조치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낳은 바



사진 출처: sephora (블라카)

북한 관료는 노동자들에게 시장 개혁의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다.

있다. 예컨대 2002년에 단행한 시장 개혁 조치인 '7·1 조치'는 엄청난 물가 인상을 일으켰다. 당시 북한 정부는 쌀 1킬로그램의 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무려 5백50배가량 인상했다. 그런데 노동자 임금은 고작 18배가량 인상돼, 노동자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전가됐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진정한 해방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김정은의 시장 개혁을 지지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북한의 시장 개혁·개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진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우선, 지금의 대외 환경이 북한에 상당히 불리하다. 북한 경제가 회복되려면

북한 정부가 국제 금융기구들로부터 차관을 들여와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 개혁은 대외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북한의 현 경제정책은 상당 부분 중국·한국·미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대외정책

그러나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당분간 북한과 대화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제재 때문에 북한은 시장 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북한은 주로 중국과의 대외 무역에 기대 필요한 자금을 얻

으려 한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깊어질수록 북한은 중국 경제의 등락에 민감해져서,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북한 경제도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함에 따라 정치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막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각 기업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물자(물적 자원)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 등 혼란을 낳을 수 있다.

벌써 북한 현지에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게다가 북한은 그나마 부족한 자원을 대부분 군사 분야에 쏟아야 한다. 이 자원을 경제 발전으로 돌리고 싶더라도 대외관계의 악화 때문에 쉽지 않다. 또한 북한 군부 자신이 무역회사들을 틀어쥐는 등 군부가 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

따라서 시장 개혁의 폭과 속도 등을 둘러싸고 북한 관료 내에 긴장과 갈등이 커질 개연성은 상당히 크다. 또한 시장 개혁 과정에서 부담을 전가받게 될 노동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불투명하다.

북한 사회의 본질

북한 정부가 시장 개혁에 적극 나서는 것은 북한 사회가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 준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사회주의'라며 북한 관료들이 시장 개혁에 열을 올리며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고 투자설명회까지 여는 모습을 보면,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최고 단계'라는 냉소적 농담이 떠오를 법하다.

흔히 사람들은 주요 생산수단이 국유화된 것을 근거로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유화나 국가 통제 경제가 사회주의의 기준이라면, 박정희 시절의 남한도 저명한 인도인 경제학자(M K 다타-초두리)의 지적대로 사회주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유 경제를 바로 사회주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바깥에 있다는 생각이 상식으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역사에 등장한 이후, 국가는 언제나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일부였다.

그동안 북한이 채택해 온 국가 주도 경제는 20세기 중엽 세계 자본주의의 주요 흐름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중에 일본과 나치 독일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도 국유화와 국가 개입을 통해 경제를 운영했다.

후발 국가의 지배자로서 북한 관료는 노동자와 농민을 쥐어짜면서 한정된 자원을 중공업에 집중 투자해 자본 축적을 이루려 했다.

북한 관료를 자본 축적에 열을 올리게 한 진정한 동력은 동·서 진영 간 냉전적 경쟁에서 비롯됐다. 미국과 남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경제적 경쟁의 논리가 북한 관료의 정책 결정을 좌우했다. 그 논리는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축적을 위한 축적, 경쟁을 위한 경쟁'이었

다. 이 점에서 북한은 1960~70년대 남한과 본질이 다르지 않은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북한 지배 관료들은 노동자 대중을 (경제적 축적) 시스템에 종속시키고 착취율을 높여 왔다. 북한 노동계급 대중의 삶은 고단했고, 불만에 찬 대중을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북한 국가는 거대한 억압기구(강제 수용소, 공안 기구 따위)를 만들었다.

물론 북한에서는 사기업과 개인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관료가 국가를 통해 간접적·집합적으로 노동계급을 착취한다. 그러나 이것은 형태의 차이, 본질의 차이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 사회에서 진정한 분단선은 계급 착취 구조를 따라 관료와 노동계급 사이에 놓여 있지, 국가와 시장 사이에 놓여 있는 게 아니다.

북한과 같은 모습의 사회였던 옛 동구권에서 스탈린주의 관료들이 변모하

는 과정을 봐도, 북한 관료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스탈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시장자본주의로 이행했지만, 구체제의 관료들은 대부분 지배계급의 지위를 유지했다. 옛 소련 시절 KGB 요원이었던 자(푸틴)가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며, 중국의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주요 기업체를 쥐락펴락하는 자들은 대부분 중국공산당 1세대 지도자의 자녀들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국가에서 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봤자 북한 노동계급한테는 '옆으로 기울어 치는 것'일 뿐이다. 북한 노동계급이 스스로 일어서서 계급 착취 구조를 무너뜨릴 때만, 노동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 노동계급은 서방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적 권리를 지지하는 투쟁도 함께 벌여야 할 것이다.



과잉생산 자본주의에서 과잉생산은 피하기 어렵다.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김민식

북한의 관료적 지령 경제의 위기를 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시장경제는 효율적일까? 또, 시장경제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체제의 작동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자. 시장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면, 자본주의의 실패에 관한 마르크스의 분석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시장 옹호자들은 시장이야말로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에 따라 알맞게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한다. 가격은 사람들의 구매욕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경쟁하는 생산자들은 가장 수요가 큰 재화를 생산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산은 언제나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정된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보내는 “가격 신호”와 실제 상품 생산 사이에는 시차(時差)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무엇을 생산할지는 상품이 생산되기 아주 오래 전에 결정된다. 소비자가 지금 구매하는 자동차는 꼭해야 10년 전에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맞춰 설계되고 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시차(時差)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시장의 원리를 완전히 뒤엎는다.

브라질에서 한 해에 커피 수확이 안 좋았다고 치자.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커피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전 세계의 농부는 되도록 많은 커피를 재배할 것이고 수확이 늘어난 이듬해에는 “과잉생산”이 될 것이다. 그 결과 가격은 폭락하고 많은 농민들이 농장에서 쫓겨날 것이다.

시장의 신호, 곧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과 늘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들은 종종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곤 한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과 분배가 뒤죽박죽된다.

1970년대에 농민들은 가격을 올리려고 자기들이 생산한 식량을 이윤이 더 남는 듯한 해외 시장으로 돌렸다. 그 결과 가격이 폭락하자 부국들의 농민은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보다 그 일부를 창고에 보관하거나 버리는 편이 오히려 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기근이 번지고 가격이 폭락하는데도, 1980년대 창고에는 팔릴 수 없는 식량이 쌓여 있었다. 그 사이에 낮은 시장 가격은 제3세계 나라들의 곡물 생산을 망쳐놓았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시장이 생산하지 못하는 것, 곧 생산의 무질서는 대기업들의 득세로 말미암아 더욱 심화됐다.

대다수 산업에서 생산의 준비 단계는 판매 시점보다 여러 해 앞서 시작된다. 공장이나 기계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무능

그런데 세계화 시대에 흔히 자본가들은 상호 조율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 산업부문의 가격이 뛰면 상당수 자본가들이 그 부문에 동시 투자하게 될 것이다.

자본가들은 생산 착수에 필요한 원

료·기계설비·노동자를 확보하려고 서로 앞다퉈 경쟁한다. 이것은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나 일단 생산 라인이 돌아가면 팔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이러한 “과잉생산”으로 경제는 위기로 향한다. 이런 위기는 자본주의에서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작동에 근본적인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이 시장을 초과하는 내재적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과잉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지 못하는 것을 과잉생산한다. 체제는 옷과 밀을 “과잉생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살 수 없어 여전히 굶고 배고프다.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지적했듯이, “생활수단은 기존 인구보다 과잉으로 생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즉, 생활수단은 대다수 인구에게 충분히 그리고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지나치게 적게 생산된다.” 이것을 운명처럼 만드는 게 바로 시장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경제를 대규모로 정리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수익성 있는 기업을 살리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죽이는 이런 청산은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면 어려워져,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한다.

민주적 계획경제

그런데 시장경제를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도 계획경제를 불신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옛 소련권의 관료적 지령 경제가 드러낸 어마어마한 낭비와 비효율을 지적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낭비와 비효율성도 그 못지 않다. 쓸모없는 광고로 낭비되는 돈이 연 10조 원 가까이 된다. 이명박 정부는 30조 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 4대강 삽질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수는 점점 줄어드는 동시에 몸집은 점점 비대해진다.

그러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투자를 수반하는 혁신의 동기가 작아진다는 뜻이다.

또, 대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확고한 지배력은 상품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쓰레기 만두’, ‘납꽃계’, ‘숯가루 냉면’, ‘석회 두부’ 등 식품 산업의 유해 식품 파동은 이들이 위생과 상품 질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 준다. 이것이 시장 경제 하에서 “소비자의 선택”이다.

그리고 시장의 무질서는 체제를 이루는 각 부문들의 조화를 어렵게 한다. 가령, 산업 설계와 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주택 계획 없이는 서울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옛 소련과 현 북한의 경제 체제는 상명하달에 의한 계획경제다. 하지만 팻 드바인과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대중의 민주적 참여에 의한 계획경제가 가능함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이 논증을 실제 경험으로 실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로 노동계급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를 관리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지령 경제의 대안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중국공산당 3중전회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김명익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11월 9~12일에 열렸다.

그동안 흔히 중국공산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열리는 3중전회에서 국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다. 대표 사례가 1978년에 열린 11기 3중전회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중국 국가자본주의를 세계 시장에 개방하는 중요한 결정들을 이끌어 냈다.

이번 3중전회가 열리기 전, 서방 언론은 이 회의가 “11기 3중전회와 견줄 만큼 중요한 회의”라고 했다. 시진핑이 시장화 개혁에 적극 나서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중전회에서 시장화 개혁 방향이 논의됐다. 3중전회가 끝나고 공개된 결정문에는 “시장이 자원 배분에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국유기업에 현대기업제도를 도입하고, 그동안 국유기업이 독점해 온 물·석유·천연가스·전력·교통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가격이 시장 경쟁으로 결정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업 대외 개방, 금리 시장화, 위안화 환율 시장 형성 등 금융 개방의 구체적 내용도 드러났다.

이처럼 시진핑이 시장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은 중국 경제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8~09년에 중국 정부는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파에서 벗어나려고 엄청난 돈을 경기 부양에 쏟아부었다. 이때 중앙과 지방 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이 많은 투자를 했다. “국유기업이 중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주도한 셈”이었다.

과잉 투자와 부채

그 덕분에 중국 경제는 위기를 잠시 모면했다. 하지만 곧 엄청난 자산 거품, 물가 앙등, 과잉 투자 등의 문제에 시달리게 됐다. 대외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10년 31퍼센트에서 2012년 8퍼센트로 떨어졌다. 이것은 수출 위주로 성장해 온 중국 경제에는 불길한 징조다. 설상가상으로 성장률은 7퍼센트대로 내려앉았다.

그동안 정부 투자 확대로 경기를 부양한 탓에 국유기업의 과잉 투자와 부채 문제가 점차 심각해졌다. 예컨대 2012년 당시에 국유기업이 주도해 온 선박·시멘트·철강 산업에서 설비가동률은 각각 60퍼센트, 67.1퍼센트, 72퍼센트에 불과했다.

국유기업들은 투자 재원을 대부분 차입을 통해 조달해, 부채가 상당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국 관료한테 중요한 일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성장 모델을 내수 위주로 바꾸고, 시장화 개혁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 국유기업 민영화와 금융 개방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해, 과잉 투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미 지난 7월에 철도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허용했고, 상하이자유무역지대를 열어 금융 개방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호구제와 토지제도를 개혁해 도시 인구를

늘려서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호구제 개혁은 2억 명이 넘는 농민공의 엄청난 불만을 달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개혁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선, 수십 년 동안의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이 만들어 놓은 중국의 계급 권력 구조가 문제가 될 것이다. 비록 중국 경제가 막대한 해외 투자를 받고 민간기업을 성장시키며 국가자본주의에서 시장자본주의로 전환해 왔지만, 여전히 전체 경제에서 국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 세계 5백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 기업 66곳 중 42곳이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기업일 정도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다른 민간 자본이나 해외 자본과의 합작 등을 매개로 공식·비공식으로 상당히 얽혀 있기도 하다.

이런 대규모 국유기업을 장악한 지배자들(대개는 태자당 출신들)이 자신이 개혁 대상이 되는 것을 쉽게 용인할 리가 없다.

모순과 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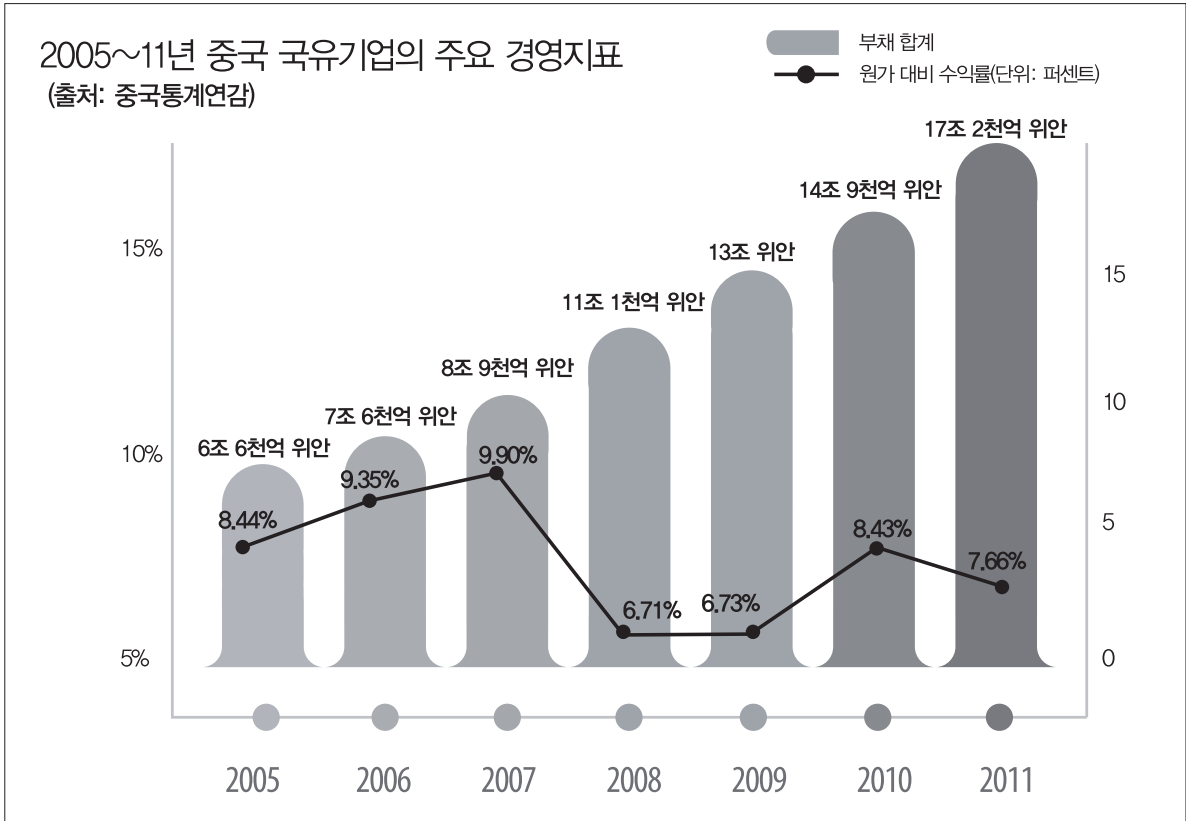
이처럼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데다 심지어 예기치 않게 지배계급 내의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5·16 쿠데타 이후 국가 주도로 수출 중심의 자본 축적을 이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장한 민간 자본은 점차 국가가 자신들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됐고, 국가와 점차 갈등을 빚게 됐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 전반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돼, 한국 지배계급 안에서 개혁 필요성을 느끼고 강조하는 분파들이 커졌다. 이처럼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과 지배계급 내의 분파 투쟁 격화는 1987년 6월 항쟁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만약 시진핑이 만만찮게 경제 개혁을 추진한다면, 중국 관료들 사이의 갈등이 보시라이 사태처럼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총리 리커창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설치와 금융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금융감독기관의 관료들과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언쟁을 벌였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왔다.

또한 시진핑이 공언한 내수 위주의 성장 전략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다. 저임금을 기반으로 수출 위주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이 뽑아 내는 이윤에 의존해 온 지방 정부들이 내수 위주로의 방향 전환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진핑의 시장화 개혁은 빈부격차를 더 키울 것이다. 그래서 3중전회 결정문에서 압도적 강조점이 ‘시장’에 있는 반면에, 애초에 공언됐던 호구제 개혁 등의 얘기는 추상적 언급에 그쳤던 것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온갖 모순에 부딪힌 자국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놓고 여전히 분열해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와 중국 경제의 위기로 이 분열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더구나 노동계급의 저항이 계속 성장해 온 상황에서 이런 분열은 중국 전체를 뒤흔드는 사태를 낳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다

김지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잇달아 연다.

사제단은 11월 22일 군산을 시작으로 전주, 익산 등지를 순회하며 미사를 열 계획이다. 종교계에서 박근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제단은 미사 참석을 촉구하면서 선거 개입과 수사 외압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사악한 반격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사제단은 지금이 “불법과 부정과 거짓의 시대”라며 불의한 정부가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부자들의 세금 개혁은 뒷전에 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물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파견근무와 비정규직을 통해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종북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 사퇴 촉구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언론을 통해 내년 1월 중 전국 사제단 총회에서 입장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내에서는 이미 국정원 게이트 폭로 직후부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6월부터 9월까지 천주교 평신도, 수도자, 15개 교구 사제들은 국정원 게이트에 항의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미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12월 8일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을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해 “국가권력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추소 시도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라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 평신도 1만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민주화를 위한 천주교행동(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정식 평신도단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교 분리’?

종교계에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오자 새누리당은 당황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대변인 유일호는 사퇴 요구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종교인의 분분을 망각한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행위라면 이를 용납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총체적

불법 선거 개입으로 국민을 우롱한 자들이 적반하장이다.

“정교분리” 운운은 새누리당의 무지와 위선을 드러내는 말이다.

우선 무지다. 세속주의의 원리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아니라 ‘국가’와 ‘교회’(또는 종교단체 일반)의 분리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아예 불가능하다. 종교가 인간의 삶을 도의시킨 채 단지 영혼에만 관여할 수도 없거니와, 인간 영혼이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문제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사회적이므로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 가령 모든 종교의 관심사인 사랑과 자녀 양육 문제가 일자리나 임금 문제와 별개일 수 있는가?

그 다음은 위선이다. 새누리당과 군사독재 정권은 1970~80년대에 ‘정교분리’를 내세워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는 종교인들을 비난했지만 정작 자기네는 우파 종교인들과 조찬 기도회 따위를 가지며 유착했다. 2000년대에도 이 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맞서 우익 개신교인들을 대거 동원해 사학법 반대 집회 따위를 열었다.

사제단의 이번 사퇴 촉구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국가기관 선거 개입 문제가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조차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는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벌며 냉각기를 갖고 싶어 한다. 동시에 검찰총장 채동욱과 수사팀장 윤석열을 찍어 내고 김기춘 라인 김진태를 검찰총장에, ‘공안통’ 이정희를 수사팀장에 앉혔다. 검찰을 길들이고 진실을 덮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마냥 박근혜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파나른 트윗 1백20만 개가 또 폭로됐다. 검찰은 국정원 트위터 담당(안보5팀)직원 22명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최근 <한겨레>는 국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심리전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추악한 선거개입의 컨트롤 타워 구실을 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님” 11월 22일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마치고 가두행진을 하는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은 물론이고 국가 기관 어디 한 곳 믿을 수 있겠느냐는 자연스러운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독립적 특검으로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할까 봐 이런 상황에서도 아랑곳 않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초연금 개악안을 짠 문형표를 앉히며 복지 후퇴를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에 이어 전교조까지 대선 개입 물귀신 작전에 끌어들이려 할지 모른다. 또, WTO조탈협정을 개정해 철도 민영화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수사로 마녀사냥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에 대항해 민주당 · 안철수 · 정의당 · 참여연대는 시민 · 사회 · 종교 단체 저명인사들을 포함해 ‘국정원과 군 등 국

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발족했다. 연석회의는 특검 TF를 꾸리고 단일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연석회의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주요 진보단체들을 사실상 포함시키지 않았고 통합진보당도 배제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회의’가 몇 달째 촛불집회를 열고 있고, 특검을 요구해 온 상황에서 굳이 따로 기구를 만든 것을 봐도 연석회의의 구성을 운동의 외연 확대로 보기는 힘들다.

연석회의의 목적이 대중투쟁이 아니라 그저 신야권연대에만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는 데] ... 심상정과 정의당이 연대의 가교가 되겠다”며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러나 급진적이지도, 투쟁적이지도 못한 이

런 연대로는 박근혜 정부와 우파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렵다.

민주당은 별다른 성과 없이 천막당사까지 점으며 완전히 국회로 복귀한 전력이 있다. 민주당은 소위 내란음모 마녀사냥이 시작되자 신속히 촛불과 선을 그었다.

안철수도 처음부터 ‘대선 정통성 시비’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요구 수준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특검의 한계도 염두에 뒀야 한다. 검찰을 틀어쥐려는 박근혜가 철저하게 수사할 인물을 특검에 앉힐 리 만무하다. 물론 특검 요구는 검찰에 대한 불신의 반영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모든 민주주의자들이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만으로는 완전 불충분하다. 지금 자라나는 분노를 노동자 투쟁에 바탕을 두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 투쟁이 노동자 투쟁과 연결되면 박근혜 정부와 우파내에 균열이 생겨날 수 있고 이런 균열은 운동에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마녀사냥이다

박근혜 정부와 우파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우익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며 국익, 국격 등을 대의로 내세운다. 물론 ‘국익’은 지배자들이 흔히 온갖 결정을 대중에게 비밀로 부칠 때 내세우는 논리다.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친자본적 · 친제국주의적 결정들을 내린다.

대중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자신의 삶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에 참여는커녕 관련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한미FTA, 한일군사협정 그리고 최근의 조달협정 등 수많은 조약과 외교협상들이 이렇듯 ‘밀실’에서 이뤄져 왔다.

이런 은밀하고 비민주적인 결정들의 대가는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이 치러 왔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으로 3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식민지배 배상청구권 문제, 재일동포 지위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저자세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일제에 의해 ‘위안부’로 동원돼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사과와 보상을 받을 기회를 날려 버렸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밀실에서 미국과 FTA 협상을 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협정 문서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대중은 불안해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됐고 물 · 가스 · 전기 등 공공재들은 사유재산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2007년 당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FTA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폭로하자 검찰은 문서 유출 혐의로 심상정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남한과 북한 정부의 관계도 온갖 추

악한 뒷거래로 뒤덮여 있다. 그들은 서로 으르렁대면서도 노동계급 착취와 대중 억압 강화를 위해서는 비밀외교로 온갖 술수를 부려 왔다. 전두환, 노태우는 몰래 북한과 수차례 비밀 접촉을 했다. 199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집권당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은 북한 정부와 모의해 판문점 부근에서 북한 사병들이 남한을 향해 사격을 하는 ‘총풍’을 벌였다.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도 안기부는 “총풍”을 재연해 달라고 북한쪽 보안 기관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런 사실들은 나중에야 밝혀졌는데 이런 과정에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도 대중은 알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는 남과 북 모두에서 지배자들의 정략적 수단으로 흔히 이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지배자들이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을 배제하고 비

밀스럽게 거래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 비밀 외교가 지키는 것은 국익이 아니라 소수의 이익일 뿐이다.

비밀과 거짓말

그래서 러시아 혁명 성공 후 볼셰비키는 “러시아의 자본가, 지주, 대러시아 민족의 이익과 특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해 온” 비밀조약의 “즉시 무조건 폐기”를 선언했다. 또, “모든 비밀외교를 폐지”하고 “지주, 자본가의 정부가 승인하거나 체결한 비밀조약들을 즉시 전면 공개”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런 점에서 진보진영의 일부가 대화록 공개를 비판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족의 이익을 해한 지극히 잘못된 행위”(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아주 나쁜 행위”(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라는 이유를 드

는 것은 부적절하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남북한 간의 비밀외교를 포함해 지배자들의 모든 비밀외교를 반대하긴 하지만, 새누리당의 대화록 공개에 침묵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새누리당은 철저히 마녀사냥 목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했다. 친노세력뿐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왜곡과 부풀리기도 서슴치 않았다. 냉전 시절부터 북한과 비밀 접촉을 해 온 새누리당이 “알 권리” 운운하는 것은 정말이지 역겨운 일이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진정한 “이익”은 노동자들 자신의 삶과 관련한 일들을 자유로이 토론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마녀사냥은 이런 민주주의의 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재판

자유민주주의의 낮은 기준도 지키지 않는 마녀사냥 중단하라

김문성

11월 12일 내란음모 의혹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국가정보원의 녹취록 왜곡이 2백72곳이나 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전수행”이 “성전수행”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전쟁을 준비하자”로,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뀌었다.

국정원은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양심은 그냥 믿으라니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이런 부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법무부는 ‘RO’가 통합진보당의 지도그룹이라며 위헌 정당 해산 청구까지 했다.

결국 지금으로선 경찰 접자 구실을 한 자가 제공한 동영상·음성 파일, 증언이 검찰이 유죄라고 내놓은 거의 유일한 증거다. 이는 국정원의 핵심 방식이 침투와 파괴 공작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내부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전 국정원장 원세훈)

침투 공작은 직접적으로 운동과 조직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 내부에 불신과 공포, 회의감을 조장해 간접적 파괴 효과도 낸다. 아비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비도덕적 수단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은 개인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교활한 협박과 매수로 접자 구실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저들이 침투 파괴 공작을 해서라도 단죄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일부 지도자들이 친북 사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진보당 자체는 의회민주주의의 규칙을 따라 선거를 통한 집권을 추구해 왔다. 이른바 RO 모임이 열린 지난해 5월경 진보당의



체제 수호 박근혜 정부는 종북 마녀사냥을 통해 자신들의 계급 지배를 위협할 급진적 사상과 노동계급 운동이 만나는 걸 막으려 한다. (2011년 사노련 재판 항의 기자회견 모습)

실제 강조점도 평화운동 건설에 있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리고 진보당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활동의 위법성 이전에 특정한 사상(양심)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 재판을 사상의 자유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사상 재판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이는 또한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구속자들이 즉각 석방되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재판의 진정한 쟁점

아무리 한계와 흠이 많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일지라도,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 이든 친북 사상이든 말과 글로 표현할 자

유를 허용해야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RO’의 실체나 조작 여부는 진정한 쟁점이 아니다. 내란이든 친북이든 내놓고 토론할 자유도 없는 사회를 어찌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자유주의적일 수도 없다. 최소한의 형식적 자유를 보장해야 자유주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 보장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마녀사냥식 재판에서 유린되고 있는 것은 단지 입증되지 않은 친북 사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들 그 자체다.

박근혜의 우익 정부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일부 훼손하는 것은 그들이 자본주의 계급지배 질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비롯한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우익 통치자들이 더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퇴행이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 통과되기가 그냥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그렇기를 바라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탄압이 궁극으로 겨누는 것은 계급지배 질서에 도전하는 사상과 운동들이다.

헌법의 틀 안에서 사회를 바꾸자는 전략은 1973년 칠레에서 어떻게 파산했는가

새누리당과 우익의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 진보 인사들은 헌법의 틀 안에서만 변화를 추구하겠다고며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사코 헌법 준수를 외쳤으나 결국 군사 쿠데타로 쫓겨난 1973년 칠레 아옌데 정부의 실패가 그런 태도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 준다.

1970년 칠레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한 사회당 지도자 아옌데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노동조합에서 영향력이 컸던 공산당이 아옌데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노동자들도 기대가 컸다.

당시 칠레는 최악의 빈곤과 오랜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급심한 위기 때문에 이미 우익 기독교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혁명”을 얘기하며 한 차례 집권한 뒤였다. 기민당 정부가 개혁 염원을 배신하자, 칠레 노동자들은 진짜 개혁을 기대하며 아옌데를 선출한 것이었다.

집권 후 첫 1년 동안 아옌데는 미국 기업 소유의 광산과 일부 칠레 기업을 국유화하고 대지주의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실질적 개혁을 제공했다. 그러나 칠레 자본가 대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극구 피했고, 따라서 아옌데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

칠레는 이내 생필품 부족과 초인플레이에 직면했고, 자본가들은 자본 해외 유출 등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고, 공장과 은행을 점거했다. 농민들도 토지를 점거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옌데는 자본가들의 반대에 맞서며 기층의 활동을 더한층 고무할 수도 있었다. 아옌데와 그의 민중연

합 정부가 누린 광범한 지지를 고려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옌데는 그러지 않았다.

자본가들은 노동자와 농민들의 ‘불법 행위’에 정부가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위헌 정부”로 간주하고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옌데는 이에 순응해 헌법이 보장하는 수단만 사용하려 했다. ‘토지와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거해서는 안 된다’며 투쟁 중인 노동자와 농민을 비난했다.

한번은 중간계급의 일부인 화물차주들이 아옌데의 개혁에 반대해 영업을 거부해 경제 활동에 지장을 줬다. 칠레 노동층은 이에 함께 대응하자고 아옌데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아옌데는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헌법을 어길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는 대신에 군대를 투입해 그 “사용자 파업”을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군대는 차일피일 미루며 나서지 않았다.

이처럼 우익은 헌법을 내세워 노동자와 민의 급진적 행동을 비난했다. 아옌데는 헌법을 중립적인 것으로 여기며 사실상 이에 순응했고, 노동자와 농민을 단속했다. 그러나 헌법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원활히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칙들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다.

게다가 계급 간 충돌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헌법을 강조하는 논리는 국가의 억압 기구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특히 군부가 아옌데의 이런 약점을 노리고 힘을 키웠다.

군부는 이미 아옌데 취임시 때 장성들의 권력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 수정 조항을 수용하도록 강요했었다. 이후 아옌데는 사회적 위기가 심해지자 군 장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더 많은 국방예산을

배당하고 그들의 봉급을 올렸다. 노동자들에게는 “국익”을 위해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아옌데의 이런 타협적 행보가 거듭되자 우익은 아옌데 집권 초에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했다. 우익이 다시금 기세를 떨치자 앞서 나가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미 우익은 많은 무기를 밀수하고 있었다.

헌법 수정 조항

그러나 아옌데는 다시 한번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자위 차원의 무장을 반대했다. “헌법이 규정하는 세력(육군·해군·공군) 말고는 그러면 세력도 무장해서는 안 된다.” “파시스트의 준동에 맞설 민중의 놀라운 힘은 바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라며 노동자들의 양보를 거듭 요구했다.

이 틈을 노리고 군부는 “불법 무장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무기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좌파 단체들을 압수수색하며 탄압했다. 물론 우익은 거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한편 공산당도, 헌법의 틀을 절대 벗어난 안 된다는 아옌데의 노선을 한결같이 지지했다. 좌파가 급진적 행동을 호소하는 것이 우익한테 명분을 제공한다며 좌우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그랬다: “극우는 무기를 밀수해 내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 동시에, 스스로 좌파라고 부르는 좌파파 세력도 같은 길을 걸으며 국유와 광란의 왈츠를 함께 추고 있다.”

또한 우익 정당이 벌이는 파괴 행위를 해결하는 것도 “검찰과 안보 기관이 대

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군부 내 전문가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도 했다.

아옌데가 쿠데타로 전복되기 한 달 전, 수병 일부가 우익 장교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아옌데와 공산당은 해군이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방치했고, 심지어 아옌데는 그 장군들을 정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아옌데 정부가 더는 실질적 개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노동자들은 아옌데를 위해 싸울 자신감을 잃었다. 승리를 확신한 군부는 결국 피노체트 지휘 하에 1973년 9월 1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와 그를 지지한 노동자와 공산당원을 무수히 살해했다.

아옌데가 피살된 지 나흘 뒤, 1973년 9월 15일자 〈이코노미스트〉는 적반하장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쿠데타로] 칠레의 민주주의는 일시적으로 정지됐고 이는 개탄할 일이지만, 명백한 것은 헌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아옌데 박사와 그 지지자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칠레 아옌데의 사례는 헌법의 틀 안에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전략이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 운동을 단속하고, 지배계급이 반격에 나설 기회를 열어 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모호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일부 추상적인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헌법은 기존의 시장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사회 변화를 이루려면 진보가 스스로를 헌법의 틀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다.

김종환

국가보안법은 친북사상뿐 아니라 북한과 아무 관계 없는 급진적 사상도 공격하는 무기다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는 1953년 형법을 만들 때 국가보안법(1948년 제정)의 기능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이다. 둘 다 ‘행위’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사상’ 자체를 처벌하는 쌍둥이 악법이다.

이것들은 냉전과 한국전쟁이라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남한 지배자들의 정치·경제 지배질서를 수호하려고 만든 악법들이다. 처음부터 ‘체제 수호법’이었던 것이다. 근래의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이 법들이 요란하게 전면에서 나선 맥락이 여기에 있다. 일각의 ‘반통일 악법’이란 분석이 편협한 이유다.

이 악법들의 체제 수호법적 특성은 1991년 5월 국가보안법 개정 때 더 분명해졌다. 당시 “분신정국”으로 불린 대규모 항의운동 속에서, ‘소련 붕괴 등 냉전 질서가 해체되고 있으니 냉전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개정은 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이를 거꾸로 개악에 이용했다. 국가보안법의 단죄 대상에 북한을 가리키는 ‘정부 참칭 단체’ 말고도 ‘국가 변란 선전·선동 단체’를 추가한 것이다. 북한과 아무 관계 없는 급진적 좌파들까지 쉽게 처벌할 수 있게 한 이 개악법을 민자당은 날치기 통과시켰다.

물론 북한의 핵 ‘위협’을 빌미로 삼은 반공주의 논리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그러나 종북, 이적, 간첩 등은 빌미일 뿐 본질은 “내부의 적” 단속이다. 최근 탄압에서 법무부가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통합진보당 해산과 내란음모죄 기소의 근거로 삼은 것은 결코 레토릭(수사)이 아니다.

극소수 특권층이 다수 노동 대중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노동자 권력 사상을 토론하고 그에 따른 정치조직을 만들 자유는 노동계급에게 절대로 필요한 권리다.

그것을 국가가 ‘이적’이라고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적이 노동계급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원세훈이 ‘민주노총, 전교조 등’을 일컬어 “내부의 적”이라고 한 것은 지배계급의 계급의식적 일원으로서 가진 진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과 형법 내란죄 조항을 이용한 사상 탄압은 궁극적으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말한 바, 즉 현실의 노동계급 운동과 과학적 사회주의가 만나는 것에 대한 지배자들의 두려움을 반영한다.

북한의 사이비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에 반대하며 노동자 권력을 지지해온 국제사회주의자들이나 사노련 등이 이 법의 제물이 돼 온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전혀 혁명적이지 않지만 노동운동에 상당한 기반이 있는 진보당이 희생양이 된 것도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정치의 만남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우익 정권의 전술인 것이다.

이런 탄압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또한 본격적인 내법 정책을 앞두고 좌파를 단속하며 억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기죽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내놓고 저항에 나서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반격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급진적 좌파가 노동계급 운동 속에 뿌리내리도록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저들의 음험한 탄압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책일 것이다.

자본주의는 왜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가

슈퍼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강타한 직후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릴 듯하다. 왜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지 마틴 엠슨이 살폈다. 마틴 엠슨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며, 연합체인 기후변화반대운동의 지도적 회원이다.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휩쓸고 간 뒤 남긴 참상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과 일터를 잃었다.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인류는 날씨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 지식과 생산력이 크게 발전했고, 따라서 더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을 빈곤하고 굶주리게 만든다. 자본주의는 기후 위기도 만들고 심화시킨다.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강타한 직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열렸다.

필리핀 대표로 이 회의에 참석한 필리핀 기후변화위원회 위원 나데레브 사노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대책을 세워 달라며 간절하게 연설했다. 사노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했다.

안타깝지만 사노를 포함한 필리핀 사람들은 회의 결과에 실망할 것이다. 이번 회의는 제1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인데, 지난 18번의 회의가 그랬듯이 뚜렷한 대책이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환경 재앙을 줄이는 것보다 대기업의 이익을 앞세운 태세인 정치인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실질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불합리는 일상다반사다. 지배계급은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자본가들은 자유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1876년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썼듯이, **“자연과 사회의 관계에서, 지금의 생산양식[자본주의]은 대체로 극악적이고 눈에 가장 띄는 결과를 낳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목표를 위한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꽤나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을 보며 놀라 뒤로 자빠진다.”

그 결과로 환경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달린다.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휩쓸고 난 뒤에 또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도시 팽창, 빈곤, 토지 부족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곳에서 살도록 내몰린다. 이주할 곳이 있다 해도 다수는 자기 일자리를 버리고 떠날 여력이 없다.

필리핀 지배계급도 서방 지배계급들 만큼이나 추악한 자들이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면 세계적 세력 균형도 알아야 하고.] 세계적 세력 균형을 알려면 제국주의 개념을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로 힘을 겨루는 것을 일컬어 제국주의라고 한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경쟁을 벌이는 것도 제국주의의 한 사례다.

과거에 스페인, 영국, 미국은 필리핀을 놓고 쟁투를 벌였다. 이후 필리핀은 [강대국들의] 수출 시장이자 값싼 원료와 농작물의 원천으로 바뀌었다. 오늘날에도 필리핀은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다.

필리핀은 쌀 같은 기초 식료품은 자급



사진 출처: Conrad Navdad (블리커)

괴물 태풍과 그 피해는 모두 자본주의 탓 자본주의가 야기한 기후변화는 초대형 태풍을 낳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에 대비하거나 피할 수가 없다. 태풍 하이옌으로 파괴된 필리핀 동부,

자족하지 못하지만, 코코넛 같은 수출용 식료품은 엄청나게 많이 생산한다.

게다가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인 사회적 분할 탓에 최빈국들이, 그리고 그 나라들의 극빈자들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본다.

2013년 보고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기상이변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거의 1년 전 태풍 보파가 필리핀을 덮쳐 2천 명이 사망했다. 태풍 하이옌은 올해 필리핀에 상륙한 세 번째 슈퍼태풍이고, 올해 10월에만 대형 태풍 7개가 필리핀을 지나갔다.

태평양 중부에서 발생한 태풍이 서쪽으로 가는 동안 마주치는 첫 번째 육지가 필리핀이다.

개개의 태풍을 다 기후변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 탓에 태풍이 심해지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태평양의 수온이 지난 1만 년 이래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태풍은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따라서 수온이 올라가면 태풍은 더 강해지고, 집중팔구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지구온난화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국제기구)은 2013년에 낸 보고서에서 대서양 북부에서도 태풍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나 점점 심각해지는 것은 단지 태

풍만이 아니다. 북극해에서 오는 보고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메탄이 바다 밑바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과정은 더 빨라지고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이고, 대기 중으로 들어가면 기온 상승을 더 부추긴다. 어떤 연구자들은 2014년 9월이 되면 북극에 “얼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극지방의 얼음은 지구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를 다시 우주로 반사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지구 온난화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다.

세계 모든 곳에서 날씨와 기후가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세러패일린(미국 공화당 소속 정치인)의 고향 알래스카의 올해 10월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거의 8도나 높았다.

바로 얼마 전에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해수면은 역사상 최고로 높았다.

지금 추세로 가면 올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알래스카에서]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다. 기온이 높으면 만년설과 빙하가 녹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는 데 일조한다. 해수면이 올라가면 태풍의 파괴력이 세지고 홍수도 일어난다.

11월 14일 <이코노미스트>는 태풍 하이옌이 일으킨 경제적 손실액을 90억 파운드(약 15조 원)로 추산하면서, 손실액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태풍이 매우 가난한 지역에 타격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 부유한 나라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손실액은 더 커질 것이다.

2011년 이래 미국에서는 기상이변이 25차례 일어났고, 그에 따른 손실액은 6억 파운드(약 1조 2백억 원)였다.

그러나 기상이변이 끼치는 영향은 순전히 돈으로만 측정할 수 없다.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최대 1천1백만 명이고, 약 60만 명이 노숙인 처지가 됐다.

2010년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홍수로 농경지가 57만 헥타르 이상 파괴됐다. 2011년 아프리카 동부지역에서 일어난 가뭄은 1천3백만 명에게 피해를 줬다. 2012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가뭄으로 곡물 생산이 25퍼센트 감소했다.

섬씨 2도

그러나 정부들은 여전히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데 매우 굶뜨다.

2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는 세계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견줘 섬씨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모든 참가국을 강제하는 협정을 2015년까지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일어난 기후변화로 발생한 피해를 되돌리기에 불충분한 이 온건한 협정조차 2020년 이후에나 실행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역사상 최고로 높았다. 그래서 바르샤바 기후변화 회의가 열리기 바로 1주일 전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는 ‘섬씨 2도’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르샤바에 모인 각국 정부 대표들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화석연료 관련 기업들에 책임을 묻고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는 점을 안다.

오늘날 많은 연구 결과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꾸더라도 세계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친환경적인” 정부가 되겠다

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주는 정부 보조금을 삭감했고 석유와 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수십억 파운드를 투자했다.

전 세계 상위 2백 개 기업은 2012년에 4천 4백10억 파운드(약 7백50조 원)를 새로운 석유와 가스를 찾는 데 썼다. 이 돈을 친환경 에너지에 썼더라면, 위험천만한 지구온난화를 막는다는 목표에 지금쯤 훨씬 더 가까워졌을 것이다.

이런 불균형은 제국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주요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의제를 빈국들에 강요하기 때문이다.

서방 정부들은 남반구의 빈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방 정부들은 그 문제에 큰 책임이 있다.

최강대국 정부들은 영향력을 행사해 이번 바르샤바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예전에 유럽과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오염과 환경 파괴를 일으켜야 하는 이유는 없다. 오로지 자본가들의 근시안 탓에 산업 발전이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것이다.

태풍 하이옌이 낳은 참상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즉, 이 체제에 도전해서 인간과 지구를 위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교훈을 준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80호 / 번역 차승일



“환경파괴 기업 대변인들이 회의장을 차지했다” 국제노동총과 환경단체들은 정부들을 비난하며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장에서 철수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베락이들을 위한 환경 가이드 —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
마틴 엠슨 지음, 김종환 옮김,
노동자연대다함께, 3,000원

기후변화와 자본주의
조너선 닐 지음, 김종환 옮김, 책갈피,
16,000원

레닌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기

토니 클리프의 레닌 평전 4부작의 마지막 권 《레닌 평전 4: 볼셰비키와 세계혁명》이 출판됐다.

《레닌 평전 4》는 1919~24년에 레닌과 볼셰비키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을 건설해서 혁명을 확산시키려고 했던 노력, 그 성공과 실패를 다룬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승리 후 전 세계에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이 넘쳐났다.

혁명의 물결이 유럽 대륙 전체를 휩쓸었다. 1919년 3월 21일 부다페스트에서, 4월 7일 뮌헨에서 소비에트 공화국이 선포됐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의 노동자들이 거대한 저항에 나섰다.

당대의 혁명가들은 모두 세계혁명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다. 1919년 7월 레닌은 “올해 7월은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7월이 될 것이다. 내년 7월에 우리는 세계 소비에트 공화국의 승리를 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전망은 혁명가들의 공상이 아니었다. 당시에 우파들조차 혁명의 기운을 감지하고 인정했다. 겁에 질린 영국 총리 로이드-조지는 프랑스 총리 클레망소에게 다음과 같이 써 보냈다.

“유럽 전역에 혁명의 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 전과 다름없는 상황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뿐 아니라 분노와 반감도 매우 심각합니다. 유럽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대중은 기존의 정치·사회·경제 질서를 모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각국에서 공산당이 등장해 성장했고, 레닌과 볼셰비키는 혁명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승리로 이끌고자 코민테른을 건설했다.

코민테른은 매우 짧은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공산당을 대중 정당으로 성장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레닌이 러시아 국내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각국의 신생 공산당에 보낸 세밀하고 구체적인 조언은 놀라울 정도다. 1919년 4월 27일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에 보낸 장문의 전보에서 레닌은 대중에게 널리 읽힐 리플렛과 신문을 제작·인쇄하기 위해 종이와 인쇄기를 몰수했는지까지 확인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시기, 병상에서도 혁명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분투한 레닌의 삶과 정치는 오늘날 혁명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다.

그러나 1920년 중반쯤에는 파업·시위 물결이 잦아들고 봉기들이 고립돼 모두 분쇄되면서 혁명운동이 퇴조했다. 헝가리와 바이에른 소비에트 정부가 무너지고, 독일 공산당이 1919년 1월뿐 아니라 1920년 3월 카프 쿠데타 때도 재앙적 실수를 저질렀다.

레닌은 중서부 유럽의 미숙한 신생 공산당들이 쉽게 혁명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이 신생 공산당들에 전략과 전술을 가르치려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다.

코민테른은 혁명에서 공산당이 해야 할 구실을 분석하고,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를 정했다. 또, 의회 선거나 기존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문제와 농업 문제나 민족·식민지 문제 등을 토론하고 방침을 결정했다.

교사와 학생

레닌은 혁명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좌파》 공산주의 — 유치증》을 썼다. 좌파파들을 비판하며 대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무조건



《레닌 평전 4: 볼셰비키와 세계혁명》 토니 클리프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360쪽, 15,000원

활동해야 한다는 레닌의 주장과, 불가피한 타협과 불필요한 타협을 구분해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코민테른은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1923년 6월 불가리아 우익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군사 쿠데타로 전복했는데 불가리아 공산당은 이를 수수방관했다. 코민테른은 불가리아 공산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무장투쟁으로 우익 정부를 전복하라고 명령했다. 무장봉기에 필요한 정치적·조직적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뿐 아니라 코민테른은 독일 공산당의 재능 있는 지도자 파울 레비를 당 지도부에서 쫓아내고 모험주의적 쿠데타(1921년 3월 행동)를 부추겼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상황을 마무리 지은 곳은 독일이었다.

내전을 치르고 힘겹게 살아남은 러시아 노동자 정부가 신경제정책으로 후퇴하고 있을 때 독일에서 새로운 혁명의 희망이 솟아났다. 1923년 독일 노동자들은 천문학적 물가 폭등에 분노해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노동조합 지도부와 개혁주의 정당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하고 반대했다. 반면 파업에 함께한 독

일 공산당은 순식간에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받는 대중정당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독일 공산당 지도부는 노동자들이 정부를 무너뜨렸는데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공산당 지도부는 1919년과 1921년의 실패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이로써 1918년에 시작된 독일 혁명은 1923년에 최종 패배했다.

러시아 혁명이 보여 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자 세계는 파시즘과 전쟁이 판치는 야만의 시대로 진입했다.

지은이 토니 클리프는 러시아 공산당과 서구 공산당의 관계를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비유해, 코민테른의 성과가 교사들의 자질뿐 아니라 학생들의 출신 배경, 준비 정도, 자질에도 달려 있었다고 평가한다.

레닌과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신생 서구 공산당이 혁명의 전략·전술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이것이 각국 공산당의 실제 투쟁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해, 엄격한 원칙과 혁명적 현실주의를 잘 결합시킨 혁명적 정당은 각국의 혁명가들이 자체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단련되면서 건설될 수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코민테른의 실수에 분통터지기도 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겪은 레닌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 죽어가면서도 러시아 혁명을 구하려 한 레닌의 필사적 투쟁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준비된 혁명적 정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껴진다.

그리고 부질없다는 걸 알면서도 ‘만약에’라는 단어가 자꾸 머리를 맴돈다. 레닌이 이랬다면, 트로츠키가 저랬다면, 코민테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 등.

시간이 한참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시 상황에서 당시의 혁명가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만 혁명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실패에서 배워, 이후의 혁명에 적용하는 것은 온전히 오늘날 혁명가들의 몫이다.

이승민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만 강화시킬 차등 지원

11월 12일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속한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줄이며, 특히 ‘매우 미흡’ 등급 대학들은 폐쇄하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안이다.

정부재정 지원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등급 대학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정원 감축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나머지 대학에는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을 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국가장학금(Ⅰ, Ⅱ 유형),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최우수’부터 ‘보통’ 등급까지 대학은 모든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 학자금 대출에서 제한을 받는다. 또, ‘매우 미흡’ 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과 학자금 최소 대출 등의 조치를 받는다.

지금도 대학 서열화가 낡은 폐해가 심각한데 이런 등급 나누기는 대학의 서열을 더 고착화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격차, 소위 인기 학과와 비인기 학과의 격차, 상위권 대학과 중하위권 대학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정부 재정 지원은 소수 상위 대학들에 집중돼 있다. 2009년 교과부가 대학 1백88곳에 지원한 금액을 보면, 총액의 48.9퍼센트가 상위 10개 대학에 지원됐다. 정부가 ‘최우수’ 대학으로 분류할 그룹은 재정이 비교적 탄탄하고 이름난 대학들로 이뤄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정부의 안은 오히려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곳에 재정 지원을 끊어 대학 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대학 진학률

이런 교육 불평등은 계급 불평등도 더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의 평가에 따라 ‘미흡’이나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을 대학은 노동계급 자녀의 비중이 상위권 대학

보다 더 높은 대학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안은 노동계급 자녀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안은 부실 교육의 책임이 없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안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부실 교육의 책임이 없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가 ‘미흡’, ‘매우 미흡’ 등급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질 낮은 대학에 다닌다고 낙인찍히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으며, 자신이 다니던 대학이 없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퇴출되는 대학의 교직원들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처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부실 교육의 책임은 학생과 교직원이 아니라 대학에 재정 지원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비싼 등록금을 받아 적립금 쌓기에 바빴던 사학 재단들에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대학 부실에 책임이 있는데도 사학법인에 특혜를 주려 한다. 정부는 법인 해산시 대학의 잔여 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려고 사학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라며 구조조정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교육은 누구나 누릴 권리이고 그런 점에서 대학진학률은 오히려 높을 수록 좋다. 정부가 대학진학률을 문제 삼는 것은 경제 위기 시기에 교육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긴축을 강요하기 위함이다.

학령인구 감소?

정부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2017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학령인구가 더 적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정원이 미달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고,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정원 감소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다수 사립대학들에는 이것이 대학 운영에 어려

움을 주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의 진정한 해결책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비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다. 대학 운영 능력이 없거나 부패한 대학은 폐쇄할 것이 아니라 재단을 퇴출하고 국립화해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부유층과 기업들한테 세금을 건어서 마련해야 한다. 등록금을 없애고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최대 14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상위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크게 늘어 4백77조 원가량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돈을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거대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고, 더구나 노동계급의 투쟁과 연계돼야 한다. 2006년 프랑스 대학생들이 노동유연화 악법인 CPE법(최초고용계약제도)을 폐도시키기 위해 노동조합과 연대해 대중 투쟁을 벌였듯이 말이다. 대학생들만의 투쟁으로는 자본주의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이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 활동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적자를 빌미로 임금·노동조건을 공격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서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공공 부문 부채 확대로 득을 본 대기업·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착한 적자'를 지원하고 공공기관들이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